

월간

다 함께

2002년 2월[9호]

- 아르헨티나
- 월드컵과 정치
- 인도-파키스탄 전쟁
- 권영길의 올해 선거 전망
- 정성진의 세계경제 분석

반란의

아르헨티나



세계 민중의 적

부시는 전쟁광이다
그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자다
부시는 환경파괴범이다
그는 지구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자다
부시는 오만한 제국주의자다
그는 제3세계를 억압하는
독재자다
부시는 세계 민중의 적이다

STOP THE WAR

2월19-21일에
부시가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한국 민중의 저항에
부딪힐것이다

2월20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함께
부시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자

불안정한 세계

핵심 국가 권력 기관들이 연루된 부패는 김대중 정권을 회복 불가능한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90퍼센트가 한국을 '부패한 나라'로 보고 있다. 정권의 우익 반대파 신문인 <조선일보>가 느끼는 위기 의식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지금 국기의 봉괴를 보고 있다. ... 국가 전체가 위기다. ... 하나같이 청와대 · 국정원 · 검찰 등 권력 중추들과 연계돼 있다."

결국 김대중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권력 기관의 부패에 대해 사과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며 내놓은 특별수사검찰청은 누구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대중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부패 척결"을 말했다지만 그 뒤의 사태들은 그의 말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거나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의 포로다. 이것은 위기에 빠진 무기력한 정부의 전형적 특징이다.

한편, 2002년의 세계는 더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 우리의 세계는 전쟁에 휘말렸고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져 있다. 세계 자본이 낳는 모순들은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테러와의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전쟁 일보직전이다. 이스라엘의 확전과 아세르 아라파트의 무장 투쟁 중단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계속 죽어 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폭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희생자 숫자는 9월 11일 테러 희생자 숫자보다 더 많다. 빈 라덴을 체포한다는 전쟁의 애초 목적은 온데간데없다.

전쟁의 결과로 미국은 전 세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사태가 호전되기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서방의 이해관계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고 찍혀 있는 몇몇 "불량국가"들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라크와 소말리아에 대한 군사 침공이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이라크에 대한 전면전이 아프가니스탄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부시 정권은 이라크 공격을 거의 기정 사실로만들고 있다.

경제 침체가 엄습하면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대량 해고와 복직 삭감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악인 5.8퍼센트를 기록했다. 12월 한 달 동안에만도 12만 4천 명이 정리해고됐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지배자들의 정신 나간 우선순위에 도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저항이 세계 자본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민중에게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경제 붕괴의 대가를 떠넘기려는 지배자들의 시도를 거부했다. 아르헨티나의 저항은 지난해 투쟁의 절정이었다. 아르헨티나는 퀘벡, 예테보리, 제노바, 브뤼셀보다 더 멀리 나아가, 정부를 무너뜨렸으며 세계의 지배 계급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판돈이 커졌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판돈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배 계급의 공세가 강화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저항도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절망에 맞서 더 커다란 저항을 구축해야 한다.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은 새로운 대안을 건설하는 투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목차

4 저들의 세상 우리의 세상

특집1

- 8 지금의 아르헨티나 상황
- 10 페론주의를 넘어
- 12 격변의 라틴 아메리카

특집2

- 16 인도-파키스탄 전쟁
- 19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의 교훈
- 21 월드컵과 정치
- 24 양심적 병역 거부
- 26 김대중과 검찰 부패
- 28 노무현은 민주 개혁가인가
- 30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의 2002년 선거 전망
- 33 철도 사유화 반대 투쟁
- 35 주5일 근무제
- 37 정성진 교수의 세계경제 위기 전망

독자 투고

- 41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 43 "크리스마스 해방"을 읽으

44 서평

"다함께"에 가입하고 싶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Tel : 02-3295-4773 / Fax : 02-968-5907
E-mail : altogether2002@ycos.co.kr
<http://altogether.jinbo.net>

독자 편지, 투쟁 소식/보고 등을 보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호 마감은 2월 13일입니다.
E-mail: altogether@orgio.net

또다시 파업에 돌입할지 모르는 CBS 노동자들



기독교방송(CBS) 노동자들이 또 다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CBS 노조원들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6일까지 임금 인상, 권호경 사장 퇴진, 정관 개정을 요구하며 265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권호경은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용역 깡패까지 동원했고 직장폐쇄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해, 결국 재단 이사회로부터 임금 인상과 '사장 청빙 제도' (사장을 선임할 때 직원 대표 3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정관 개정 약속을 받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노조와 합의한 지 두 달 만에 재단 이사회는 정관 개정 약속을 내팽개치고 노동자들 분노의 표적인 권호경 사장을 세번째 연임시키려 하고 있다. 사측이 노조와 합의한 사항 가운데 실제로 이행한 것은 임금 인

상뿐이다. 사측은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했으나,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와 노동자들을 더 화나게 했다.

지난 12월 14일 재단 이사회는 노조원들의 항의를 피해, 신라호텔에서 묵동 CBS 사옥으로 옮겨다니며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강행하려 했다. 노조원들은 필사적으로 회의장을 봉쇄해 사장 선임을 저지했다. 지금 이사회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약속파기

CBS 노동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1999년 CBS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 지급과 재단 개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도 권호경은 재단 개혁을 약속했다가 파업이 끝나자 그 약속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바 있다.

민주화 투쟁 경력을 앞세워 8년 동안이나 사장을 연임한 권호경은 총선을 석달이나 앞둔 상황에서 2000년 민주당 김옥두 사무총장에게 '축 총선 승리'라고 쓰인 화분을 보냈다. 1999년에는 김대중에게, 1994년에는 김영삼에게 낫뜨거울 정도의 '충성 편지'를 보낸 것이 폭로되기도 했다.

재단 이사장인 표영은 목사는 8년 동안 재단 대표이사를 해오면서 여러 이권 사업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모 이사는 복직원의 공금을 유용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자리에 앉아 있다.

CBS 노동자들은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보도 기능을 빼앗겼을 때도 방송국을 지키며 암울한 군사정권 시절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부패하고 권력에 아첨하는 권호경과 재단 이사회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침묵

작년 CBS 파업 당시 권호경 사장이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비롯해 대부분의 기독교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들이나 기독교민사회연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같은 단체 정도만이 재단 개혁과 노조를 지지했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계 내에서 권호경과 CBS 재단 이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향린교회 목회자들은 최근 'CBS 정상화를 바라는 향린교회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노사합의 이행과 권호경 3연임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갈수록 보수화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와 KNCC를 비판했다.

지난해 김대중은 언론사주들을 구속하며 요란하게 언론 개혁을 외쳐댔다. 그러나 김대중은 CBS 노동자들이 CBS 재단 개혁을 요구하며 2백65일간 파업했을 때, 또 재단측이 합의 사항을 간단히 무시했을 때도 재단 이사회에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조승의

외과 수술 같은 정확성?

초정밀 무기가 동원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의 오폭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적어도 1999년 3~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대의 유고 공습 때의 갑절이라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지난 1월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파티아 주에서 발생

한 차량 행렬에 대한 오폭으로 인해 65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최소 민간인 1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학자의 비공식 보

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는 4천 명에 육박한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1999년 3월부터 78일 동안 계속된 유고 공습 당시 나토군의 오폭 90건으로 5백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쟁의 비극

기성 언론은 전쟁이 아프가니스탄 민중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줬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 없다.

구호의 손길이 닿기 힘든 산악 지역에서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은 폭격의 공포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거리를 헤매고 있다.

주민 갈람 라자(42)는 “마을 사람 대다수가 설사와 마른 기침, 위장 장애, 내장 출혈을 앓고 있다”면서, “온갖 종류의 풀이란 풀은 다 뜯어 먹으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어머니 젖이 말라 버려 풀죽만 먹고 있는데, 설사와 질병으로 모두 배가 풍선만하게 부풀어 올라 있다.

당나귀를 타고 며칠씩 걸려야 접근할 수 있는 깊은 산간 오지 주민들은 먹을 것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다.

이들 산간 오지 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아프

가니스탄 공격 이후 끊겼고, 국제 구호단체의 구호품 또한 눈이 내리면서 수송이 중단됐다.

일부 접근 가능 지역에 보내는 구호품 역시 언어 소통이 안 돼 창고에서 썩어 가는가 하면, 강도나 군벌들의 약탈 따위로 유실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캐럴 벨라미 국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 가고 있으며 올 3월까지 식량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더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적자 위기의 건강보험

1월 4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올해 1월 1일로 예정돼 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경총, 전경련 등은 위선적이게도 재정이 통합되면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며 재정분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격이다.

한나라당은 199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정통합안을 건강보험 재정 파탄 이후 완전히 뒤집어 재정분리를 주장했다. 얼마 전 이에 반발하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홍신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했다.

경총과 전경련에 소속된 사장들에게 재정통합은 두 가지 골칫거리를 의미한다. 첫번째로 보험급여 확대 압력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분리된 의보공단 중 재정이 나쁜 쪽을 기준으로 보험급여 범위가 정해졌으나 통합 재정의 규모가 노출되면 급여 확대에 대한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사장들에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의미한다. 두번째는 현직장의료보험공단의 재정은 직장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공단 내 재정운용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장들과 직장의료공단 노조가 참여한다. 수조 원에 달하는 보험료 관리권이 그들의 손을 떠나는 것은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1999년 의료보험 통합 직전에 만들어진 직장의료공단 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불공평한 의료보험 체계와 의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불만을 느끼는 점을 이용해 재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사장들은 이것이 마치 직장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 농민들 사이의 갈등인 양 부추기려고 지역 대 직장의 대립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의료보험료조차 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것을 불만스러워할 노동자들은 없다.

이들 재정 분리론자들은 한결같이 보험료 부과와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사장들이 말하는 형평성이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쳐도 직장의료 노조와 한국노총의 주장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과 약률이 30퍼센트 정도라거나 통합 이후 지역의료의 적자를 직장의료보가 떠안게 돼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주장은 재정적자와 보험료 부담 증가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직후에 의보수가가 대폭 인상되고 기존에 없던 처방전료와 조제료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인상된 수가는 차치하더라도 처방전료와 조제료만으로도 매월 약 3천억 원이 추가로 빠져나갔다.

정부는 심각한 적자로 허덕이던 지역의료에 재정지원 1조 3550억 원(전체의 26.1퍼센트) 외에 의보수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 지원액 5450억 원과 2001년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7325억 원을 투입했다.

노동자들의 보험료가 의약분업 이후 1년만에 약 50퍼센트나 인상됐음에도 늘어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기

의료보험료 인상에 항의하는 퍼포먼스

때문에 2001년 직장의료보의 2조 312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또 다시 이 돈을 메꾸려고 올해 직장 의료보험료를 모두 9퍼센트씩 올리기로 했다. 게다가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담배에 건강부담금 200원을 부과해 재정적자분을 채우기로 했다.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복지정책 자체에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인 대신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좀더 많은 영역을 사유화하려는 정책 때문에 사회복지제도는 항상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지역의료 가입자의 절반 가량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나머지가 자영업자와 농민, 어민, 실업자 등이다. 소수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의료 가입자들은 직장의료 가입자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직장의료에 가입된 노동자들은 통합된 건강보험제도에서 이들 — 비정규직 노동자들 — 과 단결해 보험료 인하, 보험급여 확대, 의보수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싸울 수 있다.

안진영

높아가는 청년 실업

청년 실업이 한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1월 10일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6퍼센트, 22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통계는 고용 사정 악화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 주당 18시간 미만 불안정 취업자,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가 고용안정 센터를 통한 취업률을 두 배 이상 부풀려 발표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어차구니 없이 조작한 수치로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업적을 자랑했다. 실제 청년 실업률은 40퍼센트에 달한다.

노동부는 최근 청년 실업의 원인이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과다 배출”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청년실업자 중 2/3가 고졸 이하의 저학력이다.

김대중은 2002년 청년 실업 대책으로 인턴제를 확대하고 IT 분야 유망 직종 직업 훈련 등을 마련하겠다

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계 IT 산업의 불황에 따른 남한 IT 산업의 불황은 이 약속을 무망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1998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인턴제는 정규직 신규 채용을 대체하고 단순 업무에 한정시켜 불안정 고용만 심화시켜 왔다.

<조선일보>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신규 창업·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과감한 기업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부의 독점과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해고하기 좋은 나라’를 뜻

한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말하지 않는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6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루빨리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한다.

이원재

중소기업채용박람회 에 물려든 구직자들

김영삼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김대중

작년 한해에만 2백41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다.

이 수치는 2백75명이 구속된 1992년 이래로 가장 높다.

김대중 집권 4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들은 6백86명인데, 이것은 김영삼

집권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 6백32명보다도 많다.

김영삼 정부가 주당 두 명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주당 세 명꼴로 노동자를 구속했다.

현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문성

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아직도 45명이 차가운 감옥에 수감돼 있고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수배중이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만 모두 세 번에 걸쳐 수감됐다.

아르헨티나의 폭발

이정구

지난해 12월 20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데 라 루아가 분노에 찬 실업자들의 식량 폭동에 직면해 사임했다. 이 반란은 적어도 3년 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투쟁의 결과였다.

아르헨티나 노동자들, 실업자들, 심지어 중간계급조차 지난 몇 해 동안 심각한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었다. 최근 실업률은 거의 20퍼센트에 이른다. 심지어 정부는 연금 생활자 1백40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2천 명이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데 라 루아와 재무장관 도밍고 까바요가 서방 은행에서 빌린 외채를 갚기 위해 복지 재정을 삭감하고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IMF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려 한 것이 투쟁을 촉발시켰다.

폭동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휩쓸자 데 라 루아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를 지배했던 군사 정부의 가혹한 탄압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계엄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대가 '5월 광장'으로 모여들자 데 라 루아는 투쟁을 진압하려 했다. 진압 과정에서 적어도 수십 명이 죽었다.

하지만 이런 탄압으로도 투쟁을 잠재울 수 없었다. 결국 데 라 루아와 도밍고 까바요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재앙

IMF와 미국 관료들은 데 라 루아와 까바요가 아르헨티나의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인들은 까바요가 미국과 IMF의 요구에 충실한 예스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까바요가 1990년대 초에 도입한 페그제(아르헨티나

페소화와 미국 달러화를 1 대 1로 연동시키는 것)는 아르헨티나 경제를 더한층 위기에 빠뜨렸다. 아르헨티나는 IMF가 강요한 자유 시장 정책들 —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공기업의 사기업화, "유연한" 노동정책 등 — 을 충실히 따랐다. 중남미에서 가장 발전한 사회 가운데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는 빈곤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데 라 루아 정부는 긴축 정책을 더 강경하게 밀어붙일 뿐이었다.

대부분의 서방 언론들은 파산한 중간계급이 항의 행동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봉기는 노동자와 실업자들이 여러 해 동안 투쟁을 벌인 결과였다.

'사회주의를 위한 운동'(MAS)이라는 단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번 반란의 동력은 평범한 노동자들을 비참하게 만든 기아였다. 탄압은 가혹했다. TV에 비친 모습은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다. 몇 시간 만에 수 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투에 참가했으며, 실업자 단체들도 동참했다."

데 라 루아가 도망가기 직전에 노동조합총연맹(CGT)의 지도자 로돌포 다에르가 총파업을 호소한 데 이어 아르헨티나노동운동(MTA : CGT에서 갈라져 나온 반대파 노조) 지도자 우고 모야노도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페론주의 정당은 지난해 12월 시위를 이용해 데 라 루아를 제거하고 주도권을 잡았다. 페론주의 정당은 데 라 루아에 반대하는 시위에 동참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다. 이 당은 재빨리 이 투쟁의 선두에 서서는, 아돌포 로드리게스 사아를 임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로드리게스 사아는 외채 상환 중단을 선언하고 1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투쟁을 기성 정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뿐

이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로드리게스 사야는 로돌포 다에르와 우고 모야노를 만나 총파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월 2백 달러인 최저 임금을 두 배로 올리고 기업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일 뒤에 또 다른 대중 시위가 수도를 휩쓸었다. 로드리게스 사야가 공무원 고용 인원을 동결시켰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을 점령한 시위대는 로드리게스 사야 정부에 포함된 부패 정치인을 비난했다.

시위대는 또한 아르헨티나 법원이 예금 인출을 금지시켜 폐소화를 찾을 수 없게 되자 분노를 터뜨렸다. 사야의 계획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폐소화보다 가치가 작은 아르헨티노로 임금을 지급받게 될 터였다.

평가절하가 핵심인 새 화폐 계획은 투쟁의 불씨 구실을 했다. 실업자와 ‘피켓팅 시위대’의 투쟁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도로를 봉쇄하고 직접적 행동을 주도해, 지방 공무원들로 하여금 식량 원조나 비상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피켓팅 시위대에 의해 자극을 받은 노조 지도자들도 지난 2년 동안 총파업을 일곱 번 단행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달러화로 표기된 외국인 투자와 채권은 보호해 주기로 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팻말에 “나는 내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달라고 은행에 맡긴 것이다”라는 글을 써 놓았다.

페론주의 정당 지도부와와의 갈등 때문에 로드리게스 사야는 사임하고 두알테가 대통령 직을 이어받았다. 그

러나 두알테도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 보인다.

줄타기

페론주의 정당은 노동자와 빈민들에게 양보조치를 얻어 내는 것과 아르헨티나 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인기 없는 정부를 무너뜨린 대중 봉기가 일어났던 나라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1989년 동유럽 민주주의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들, 1998년 인도네시아 혁명 이후의 정부, 2000년 필리핀의 사례 등이 이를 보여 준다.

페론주의 정당은 데 라 루아와는 다른 정책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데 라 루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두알테는 IMF와 은행가들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는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아르헨티나는 파괴됐다. 아르헨티나 모델은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러나 그는 페론주의 정당이 1990년대 초반에 카를로스 메넴 정부 하에서 자유 시장 모델을 세웠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더욱이 두알테의 평가절하 계획은 노동자와 빈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두알테가 평가절하 계획을 발표하자 또다시 분노가 폭발했다. 게다가 두알테 정부에 부패한 각료가 포함돼

있는 것 때문에 저항 세력 내에서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항의 시위자들은 새로 선거를 해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 국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데 라 루아를 몰아냈던 대중 봉기 때처럼 사람들은 빈 냄비를 들고 다니며 기아에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망

아르헨티나 노동자와 실업자들의 투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데 라 루아를 몰아낸 민중의 거리 시위는 중간계급까지 포함된 다계급적 성격을 불가피하게 띄고 있다. 그래서 '5월 광장'에 모인 항의 시위대의 구호에는 계급적 요구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노동자들은 생활 수준 하락에 저항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 세라믹을 만드는 사논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면서 지역 단체들과 사회단체를 끌어들

여 투쟁의 과제와 진로를 토론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힘은 노동자 대중의 투쟁에 있다. 거리 투쟁은 공장 점거와 같은 생산 현장 투쟁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페론주의를 극복하는 일이다. 페론주의는 노동자 운동에서 생겨난 포퓰리즘 이데올로기다. 후안 페론이 집권한 이후로 노조 관료들은 페론주의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노동조합총연맹이 국가에 종속돼 있는 것에 반대해 갈라져 나온 아르헨티나노동운동조차 페론주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심지어 도시 무장 게릴라 조직인 몬토네로스도 페론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 사아나 두알데가 보여 주었듯이, 페론주의 정당은 아르헨티나의 위기를 노동자와 민중의 희생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 현재 아르헨티나 노동자 투쟁은 페론주의가 아닌 정치적 대안이 필요하다. 

페론주의를 넘어

이정구

아르헨티나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1백 년 전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육류와 곡식을 유럽과 미국에 수출했다.

아르헨티나는 노동자 계급 투쟁의 전통 또한 풍부한 나라다. 1930년까지 노동조합 운동은 허약했고, 수많은 직업별 노조로 나뉘어 있었다. 사회주의자들과 생디칼리스트들이 1930년에 최초의 노동조합 연맹인 노동조합총연맹(CGT)을 결성했다. 1930년대부터 1948년까지 아르헨티나 산업은 발전했고, 그 결과 산업 노동자 계급이 창출됐다. 1935년~1943년에 파업이 급증했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아졌다. 그 덕분에 노동운동 내에서 직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바뀌었다. 공산당과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노동운동이 지닌 “비정치적” 태도가 바뀌었다.

1943~1945년에 후안 페론은 권력 장악을 위해 토

착 지주들과 외국 자본가들에 대항해 도시 계급들(특히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지닌 강한 민족주의 성격 때문에 파시스트를 포함한 극우에서 무장 게릴라 조직을 포함한 극좌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정치 세력들이 페론주의에 이끌렸다. 그래서 페론주의는 매우 모순되고 모호하며 혼합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

페론은 1943년에 민족주의 장교들의 쿠데타로 등장한 정부에서 노동복지장관이 됐다. 그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해, CGT 조합원들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페론은 노조 내 공산당원과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자신의 “사회 정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노조와는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사회 정의”는 노동조합에 사회·경제적 양보를 제공하는 대신 노조를 국가에 종속시키는 것을 뜻했다.

“사회 정의”라는 표현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모호한 의미를 지닌 데다, 개인 숭배와 모든 시민 사회의 국가 종속을 강조했기 때문에 파시즘을 연상시켰다. 그러나 “사회 정의”의 본질은 계급 화해를 강조하는 포퓰리즘이었다.

기업주들은 페론의 친노동 개혁을 싫어했다. 1945년 10월 17일 사장들이 친노동 개혁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전국의 노조들이 즉각 개혁을 옹호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

페론은 노동자들의 광범한 지지 덕분에 1946년 대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 그는 대선 기구를 정의당으로 개편했으며, CGT의 요직에 자신의 심복들을 배치했다. 또, 군 지도부를 숙정하는 한편, 장교들의 봉급을 인상해 군대 내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 페론의 권력 기반은 노동조합과 군대의 특권 기구들이었다.

페론주의의모순

1946~48년은 페론에게 ‘황금기’였다. 식료품 수출로 경제가 성장했으며, 국가 재정도 늘어났다. 이 시기에 정부는 중앙은행·전화국·철도·항만을 국유화했다. 1947년에 외채를 모두 상환했으며, 경제 자립을 선포했다.

페론은 경제 호황 덕분에 복지 국가(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할 수 있었다. 페론의 집권 기간에 노조는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을 절반 가까이 조직했다. 노동자 임금은 인상됐다. 페론의 처인 에바 페론의 노력 덕분에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1947년에 선거권을 얻을 수 있었다. 페론주의가 비록 권위주의적이고 친자본주의적 정책임에도 이런 성과 때문에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그에게 충성했다.

하지만 수출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전략은 1948년 이후 차질을 빚었다. 위기의 주된 이유는 해외 시장 경쟁으로 인한 수입 감소였다. 전후의 유럽 농업은 회복됐고, 미국 농산물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아르헨티나의 수출이 감소했다. 더욱이 1948년의 심각한 가뭄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페론은 노동자 임금을 동결하는 긴축 정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다. 1952년에는 외국인 자본가들에게 시장을 개방했다. 페론은 시장 개방이 일자리와 수출 증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다.

이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경제의 근본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농산물 수출은 감소했고, 국유 산업 부문은 정체했으며, 물가는 치솟았다.

1950년부터 경제 위기가 심해지자 페론은 인권, 정치적 자유, 시민 사회의 제도들을 공격했다. 반정부적 노동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급진당(당명과 달리 자유주의적 중간계급 사람들의 정당이다) 지도자조차 탄압받았다. 광적인 선동과 정치적 위협이 국가의 페론주의화와 함께 진행됐다. 1952년 에바 페론이 33세로 죽자 페론주의는 신화가 됐다.

가톨릭 교회를 포함해 페론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으며, 군부 내에서도 페론에 대한 불만 세력이 형성됐다.

1955년 군장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페론을 축출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운동 내 페론주의의 영향력을 제거하려 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성과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투쟁의 절정은 1969년 “코르도바소”(봉기라는 의미)였다. 이 봉기에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은 군부에 맞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한편, 일부 급진적 학생들은 도시 게릴라 전투를 벌였다.

이런 투쟁 덕분에 페론은 망명지인 파나마에서 돌아와 1972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이 때의 페론주의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분파 투쟁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념도 변했다. 페론주의 운동의 오른쪽 극단은 1940년대에 파시스트 민족주의에 이끌렸고, 중도파는 사회민주주의의 비슷하게 바뀌었다. 좌파 쪽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1960년대에 체 게바라의 영향을 받아 도시 게릴라 투쟁을 벌였다. 페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릴라 청년들은 몬테네로스의 토대가 됐다.

제2차 집권기 동안의 후안 페론과, 그가 죽은 뒤 권력을 물려받은 그의 처 이사벨 페론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좌파를 공격하고 노조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1975년 페론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이며 투쟁을 벌였다. CGT는 현장 조합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고, 투쟁에서 선출된 노동자 대표들이 파업을 지도했다.

노동자들의 전투성에 두려움을 느낀 군부는 좌파와 노동자 계급 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1976년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뒤 군부가 벌인 7년 간의 “더러운 전쟁”으로 수만 명의 노조 활동가들과 좌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3만 명 이상이 “실종”됐다.

1980년대 초반 군부는 다시 성장하는 노동자 계급 운동에 직면했다. 군부는 하락하는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 영국령 말비나스(포클랜드) 섬을 점령했지만, 영국에 패배한 뒤 군부 지배는 무너졌다.

여파

1983년 10월 선거에서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인

급진당의 라울 알폰신이 권력을 장악했다.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대세였지만, 알폰신이 자유 시장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노조는 반발했다.

1989년 대통령에 당선된 페론주의자 카를로스 메넬은 부패 종식과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 일을 했다. 그는 정설적 자유 시장 정책을 추진해 IMF의 신뢰를 받았다. 메넬의 두번째 집권기였던 1990년대 후반에 아르헨티나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사민당과 급진당의 선거 동맹이 배출한 후보 페르난도 데 라 루아가 메넬에 대한 환멸을 이용해 1999년 대선에서 이겼다. 그러나 데 라 루아도 메넬의 주요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심지어 그는 메넬의 경제 정책을 입안했던 도밍고 까바요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데 라 루아 집권 2년 동안 일곱 번의 총파업이 있었고, 실업자 운동이 급성장했다. 이 운동은 지난 달 데 라 루아와 그 후임자 로드리게스 사아를 물러나게 만든 투쟁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는 김대중을 페론주의에 빗대면서, 마치 페론주의가 노동자들에 대한 “피주기식” 정책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페론주의는 언제나 노동자 운동의 자주적인 발전을 가로막았다.

더욱이 메넬이나 로드리게스 사아나 두알데 모두가 노동자들에게 “피주기”는 커녕 생활수준을 공격하기에 바빴다. 페론주의는 노동자 운동에서 등장했지만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는 우파 이데올로기다. 아르헨티나 노동자 운동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페론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격변의 라틴 아메리카

이성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남미는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게릴스럽게 부를 챙겨 갈 수 있는 “준비된” 땅이었다. 1980년대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했다. 공공 자산을 사유화하고, 국가 보조금을 철폐하며, 자본과 부동산 시장을 개방하며, 노동

자들의 임금과 연금을 삭감하며, 재정 긴축 정책을 추진 하라는 것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었다.

다국적 기업과 미국은 중남미를 세계 경제에 통합하는 첫걸음으로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시대(NAFTA)를 선포했다.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의 정부들은 자본과 노동의 자유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다.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 기업들은 중남미 국가들에 보건·교육·사회복지 비용을 줄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의 실업률은 20퍼센트를 넘나들고 있으며,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는 16퍼센트, 칠레는 11퍼센트다. 노동자 임금도 대폭 삭감됐다. 이는 IMF로부터 대부받는 조건으로 임금이 거의 절반으로 삭감됐던 1980년대를 연상시킨다.

그러다 보니 지금 중남미에서는 빈곤이 만연해 있다. 너무 낮게 발표해 신뢰할 수 없는 공식 통계로도 농촌 가구의 대다수와 도시 가구의 30퍼센트가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본 생필품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남미 전체에서 60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극빈층도 중남미 지역 인구의 35퍼센트에 이르는 데 이는 10년 전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로 중남미 국가들이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줄어들었다. IMF와 세계은행이 강요한 가혹한 조건과 지금까지 진행된 사유화로 인해 중남미 경제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더욱 얽매이게 됐다.

세계 8위 경제 대국인 브라질에서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70퍼센트가 외국 기업에 인수·합병됐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번째 경제 규모를 지닌 아르헨티나의 경우, 20년 전에는 대략 대기업의 3분의 1이 외국인 소유였지만 지금은 석유·에너지·통신·공공 서비스·철도 등 핵심 산업들을 포함해 경제의 3분의 2가 다국적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다.

투쟁의 시작과 확산

라틴 아메리카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거라는 다국적 기업들의 생각은 나프타가 공식 출범하던 날부터 틀렸음이 드러났다. 멕시코 남부의 치아파스 주에서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치아파스 주의 주도(州都) 산 크리스토팔 델 카사스를 장악하고는 세계화에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 세계를 향한 첫번째 선언문에서 사파티스타는 억압당하는 자들의 봉기를 선언하고 “야 바스타!”(이제 그만!)를 외쳤다. 그 후 ‘야 바스타!’는 반자본주의 운동을 상징하는 핵심 구호가 됐다. 사파티스타는 멕시코 남부의 30개 토착민 단체의 연대 투쟁을 대변했다.

멕시코 정부는 사파티스타와 평화 협상을 질질 끄는

모두 철썬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캐나다 퀘벡에서는 2005년에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출범한다고 선언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는 끔찍했다. 대다수 중남미 민중의 생활 수준은 파헤쳐졌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권력과 부가 더한층 소수에 집중됐다. 이 과정의 희생자들은 주로 노동자, 영세 농민, 학생, 도시 빈민, 실업자들이었다.

준비된 땅

중남미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경제·정치 위기는 끝이 없어 보인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붕괴는 그 일부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1980년대가 지나간 뒤 1990년대 초반에는 인플레이가 수그러들었고 수출이 증가했다. 1980년대에 2퍼센트였던 수출 증가율은 6퍼센트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은 대중의 생활 수준 하락 덕분이었다. 경제 성과는 대다수 중남미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부채 증가로 파산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대량 실업이 일상사가 됐으며, 계급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 공공 자산을 사유화한 결과, 중남미 국가들은 국내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선택의 폭이 제약됐다.

중남미 국가들의 총외채는 1990년에 4천3백90억 달러에서 1998년에는 6천7백98억 달러로 증가했다. 1980년대 초 외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오히려 외채를 더 늘어나게 만들었

한편, 6만 명의 군인을 투입해 사파티스타가 통제하는 공동체를 포위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했다.

2001년 3월 사파티스타는 치아파스주둔 군대의 철수, 사파티스타 소속 재소자 석방,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를 명시해 놓은 산 안드레 협정 준수 등을 요구하며 멕시코시티까지 행진했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중남미에서 반자본주의 저항을 상징했다.

한편, 중남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반자본주의 저항이 계속 성장해 더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했다. 여러 쟁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의와 저항은 공통의 적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 그 적은 바로 사회적 비용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중남미 지역 전체에 자신의 논리를 강요하려는 자본주의 경제였다.

예컨대, 볼리비아의 반세르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며 공공 자원들을 사유화했다. 수자원의 사유화 시도에 반대하는 투쟁은 다양한 부문을 끌어들이었으며, 이들은 2001년 4월에는 코차밤바에서 라파스까지 6백44킬로미터

에 이르는 장거리 시위 행진을 하기도 했다. 행진에는 노동조합원들뿐 아니라 농장 노동자, 소상인, 소농, 토착민 단체들도 참가했다. 경찰의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참여한 여러 단체는 5월 이후 항의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민중 회의를 소집했다.

자본주의의 지역적 통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달러와 연동시키는 정책’이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에콰도르가 있다. 1999년 초 하밀 마우아드 정부는 대폭적인 물가 인상과 함께 생산 합리화, 보조금 폐지 정책을 펼치다가 통일노동자전선, 에콰도르 토착민연합(CONAIE)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격을 받았다. 마우아드가 유가 인상 정책을 번복한다고 발표했음에도 투쟁은 1999년 말까지 계속됐다. 2000년 1월 마우아드는 대중 봉기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다.

경제를 마비시키고, 키토 거리를 통제했으며, 민족민중협의회의로 표현됐던 대중 운동이 잠시나마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부통령 기예르모 노보아가 군부와 협력해 다시 권력을 장악했다. CONAIE의 지도자 한 명이

1992년 10만의 브라질 학생들이 페르디난두 콜로르 드 멜루 대통령의 부정 스캔들에 항의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보아 정부에 입각했으나, 노보아는 그의 전임자와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보아가 달러화 정책을 다시 시도하자 2001년 2월 7일에 전국에서 파업이 벌어졌다. 에콰도르 정부는 감금된 CONAIE 지도자 안토니오 바르가스를 석방하고, IMF가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으며 미국의 콜롬비아 개입 계획인 ‘플랜 콜롬비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저항과 대안

요즘에는 아르헨티나가 중남미가 갈 길을 보여 주는 듯하다. 아르헨티나에서 데 라 루아 정부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실업률은 신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3월에도 데 라 루아가 교육 재정 삭감과 가스 및 전기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포함한 가혹한 긴축 조치들을 발표하자 조직 노동자·학생·연금 생활자들이 파업, 거리 점거, 고속도로 봉쇄, 대중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아르헨티나의 대중 투쟁은 테라 루아의 계엄령을 무력화시키고, 그와 그의 후임자 로드리게스 사이를 물리나게 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대중 투쟁의 폭발력은 봉기를 넘어 혁명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20년 동안 대중 운동의 본보기를 보여줬다. 1970년대 말 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군부 통치의 종말을 앞당겼다. 그리고 노동자 파업 투쟁의 성과로 노동자당(PT)이 건설됐다. 1990년대에는 ‘땅없는 사람들의 운동’(MST)이 수십만 명의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토지와 주거권을 위해 투쟁을 벌였다.

PT는 주요 정당으로 발전해 여러 주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PT는 자신이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는 대중 운동과, 브라질 정부와 세계 경제가 가하는 압력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다. FTAA(미주자유무역지대)가 브라질 경제에 가하는 압력이 커질수록 PT는 기성 질서와 제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오늘날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반자본주의 운동이 넘어서 할 장애물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나라다. 미국은 ‘플랜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해 13억 달러를 제공했다. 군사 장비나 코카인 생산을 못하도록 이 보조금은 주로 화학 약품으로 제공됐다. 미국은 마약 단속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걸지만 사실은 다른 이해관계를 감추고 있다.

콜롬비아는 현 정부군이 통제하는 지역과 콜롬비아 혁명군(FARC)이 통제하는 지역, 그리고 민족해방군(ELN)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상이한 파벌 사이의 협상 테이블 노릇을 해 왔다. 1990년대 초반, 게릴라 조직을 제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우익 민병대 조직이 게릴라 조직 지도자들을 암살함으로써 좌절됐다.

‘플랜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대통령 안드레스 파스트라나가 미국 정부에 제시한 계획으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통제를 위해 콜롬비아 국가의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콜롬비아 점령의 에콰도르 군사 기지가 미국의 후원을 받는 군벌의 세력권 안에 들어갔다. “마약과의 전쟁”은 미국이 주요 마약 생산지인 페루·에콰도르·볼리비아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페루에서는 블라디미로 폰테시노스가 우두머리로 있던 억압 기구의 만행들이 폭로되면서 후지모리 정부

가 몰락했다. 대선 주자였던 알란 가르시아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현 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는 신자유주의 경제 계획에 충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칠레의 현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스도 사회당 출신인데도 신자유주의에 충실하다는 점에서는 톨레도와 똑같다.

중남미의 전체적인 상황이 매우 분명해지고 있다. 1980년대 말 소위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함께 시작된 과정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 과정의 우선 순위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중남미 경제를 “자유화”(개방)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정부의 구성이었다.

많은 새 정부들이 게릴라 조직의 지도자(파테말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나 야당 인사들(칠레)을 정부 내로 끌어들었다. 중남미의 저항 운동은 토지나 주택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에서부터 토착민들의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운동의 특징은 현 사회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종종 눈에 띄는 항의 행동을 벌이면서 세계화의 결과(환경 파괴, 인권 침해, 경제적 폐해 등)에 반대해 싸운 점이다.

멕시코 대통령 비센테 폭스가 사파티스타에 몇 가지 양보 조치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1999~2000년에 멕시코 국립대학을 14개월간 점거하며 투쟁했던 학생들의 무상 교육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멕시코-미국 접경 지역의 마킬라도라(수출 자유 지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멕시코시티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약간의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곧 멕시코 사회 전체에서 새로운 약탈과 파괴를 시도해야 할 처지에 빠질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 포퓰리스트인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석유 수입에 바탕을 둔 강력한 국민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역사적 경험은 석유 수출이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세계 시장이 시장에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붕괴시켰는지를 잘 보여 준다. 카리브해의 쿠바가 생생한 선례일 것이다.

대안은 아르헨티나·볼리비아·에콰도르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농민·토착민·유색인·여성·도시 빈민·학생 등이 부를 직접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이 부른 또 하나의 야만

이수연

각각 60여 기와 48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가 점점 전쟁 일보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한 미국의 보복 전쟁은 서남아시아의 불안정을 증폭시켜 그 지역에서 전쟁 위협을 고조시켰다. 지난해 12월 13일 인도에서 국회 의사당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인도 정부는 그 배후 세력으로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무장조직들을 지목하고 실제로는 파키스탄을 겨냥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해 1월 11일에 카슈미르 곳곳에서 인도군과 친파키스탄계 이슬람 무장조직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17명이 사망했다.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와 파키스탄령 아자드 카슈미르를 나누는 이른바 ‘통제선’을 따라 포격전이 계속되면서 이미 5만여 명이 피난을 떠났다.

1947년 인도의 독립과 파키스탄 국가의 창설 이래로 양국은 50년 넘게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충돌을 거듭해 왔다.

구실

냉전 시기에 인도는 겉으로는 비동맹·중립 노선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옛 소련 진영과 군사적·경제적 연계를 맺고 있었다. 이에 맞서 파키스탄은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도의 군사력에 필적할 만한 강대국인 중국과 제휴했다. 1970년대 초에 중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미국·중국·파키스탄의 동맹은 더욱 강화됐다.

옛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1979년에 미국이 파키스탄 군부 독재 정권을 이용해 아프가니

스탄의 무자헤딘 게릴라들을 지원하면서 두 나라의 유착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9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자, 파키스탄은 미국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군부 정보기관인 ISI를 통해 탈레반의 성장을 지원하긴 했지만, 군부 독재의 뒤를 이어 집권한 파키스탄의 민간인 지배자들은 더 이상 미국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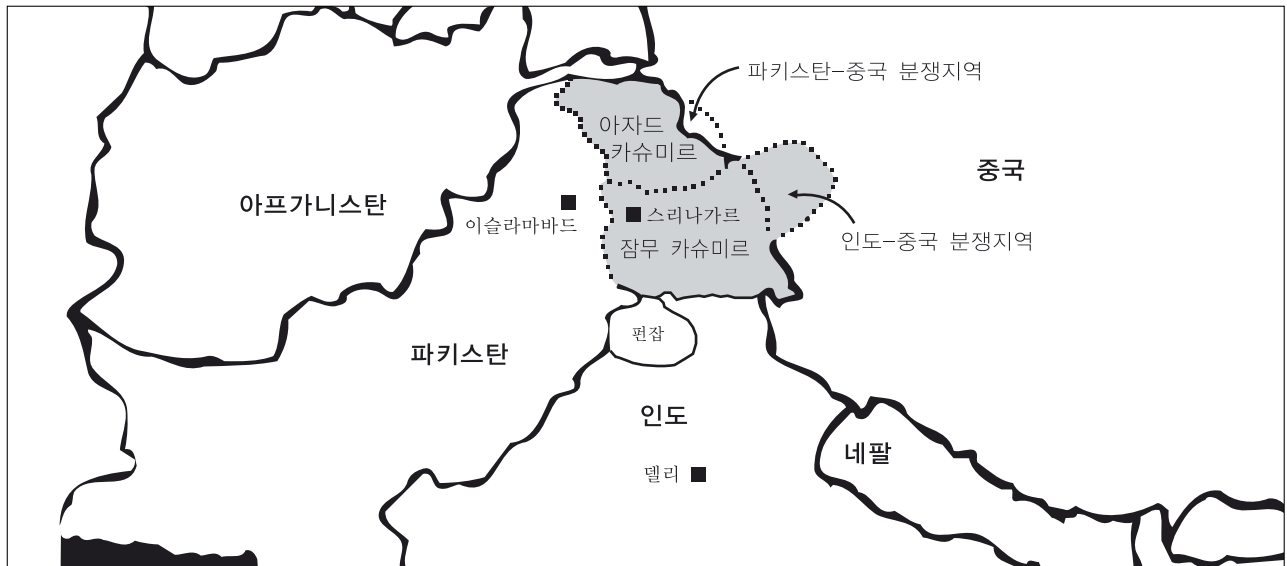
1990년대 들어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주요 “신흥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 쪽으로 점점 더 기울었다.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쟁적 핵무기 실험 뒤에 미국은 양국에 경제적·군사적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는 파키스탄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9·11 테러 사건이 터졌다. 그러자 파키스탄의 군사 독재자 페르베즈 무샤라프는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무샤라프는 IMF 차관을 비롯한 미국의 아낌없는 원조로 보상받았다. 하지만, 전쟁 결과는 파키스탄에 유리하지 않았다. 파키스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도·이란·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부동맹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한편, 카슈미르 문제에서 미국이 인도의 손을 들어주는 했지만 인도 지배자들은 내심 불안해 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급속히 호전된 것이다. 인도는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탈레반이 혼란시키고 파키스탄 군대가 지원하는 급진 이슬람

미국의 보복 전쟁은 서남아시아의 불안정을 증폭시켜 그 지역에서 전쟁 위협을 고조시켰다



게릴라들의 공격은 인도 총리 아탈 비하리 바지파 이에게 그럴 듯한 구실을 제공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밀어붙이면서 그랬던 것처럼, 바지파이는 인도를 테러의 피해자로 보이게 하려 애썼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3일의 인도 의사당 테러 공격은 바지파이에게는 선물이나 다름없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 지역에서 위험하고 낭비적인 무기 경쟁이 격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결국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그렇지 않아도 두 핵무기 보유 국가의 충돌 위협에 시달리던 그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카슈미르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카슈미르 지역의 인구는 약 1천2백만 명이다. 그 중 9백만 명은 남부의 잠무 카슈미르에서, 3백만 명은 북부의 아자드 카슈미르에서 산다.

잠무 카슈미르를 점령하고 있는 인도군의 탄압이 너무나 가혹해서, 인도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카슈미르인조차도 등을 돌릴 정도였다. 이런 탄압에 맞서 급진 이슬람 게릴라들이 살인·납치·폭파를 자행하기 시작한 것은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이 끝난 1989년부터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파키스탄 군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모두 패배했던 치욕을 되갚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카슈미르의 이슬람 게릴라들을 적극 지원했다.

인도 지배자들은 무자비한 탄압으로 대응했다.

1990년 초에 잠무 카슈미르 주지사로서 부임한 자그 모한은 도시 ‘환경 미화’라는 명목으로 무슬림이 거주하는 빈민가를 불도저로 밀어 버렸다. 자그모한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는 이스라엘 경찰을 칭찬하면서, 카슈미르를 힌두교도가 완전히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려 했다.

수많은 청년들이 게릴라 혐의로 연행되고 고문당하고 때로는 살해당했다. 경찰의 발포로 수백 명의 시위대가 희생됐다. 시민적 자유는 일절 말살됐고,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잡혀가 신문을 받거나 살해당했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잠무 카슈미르의 야만적인 고문은 상상을 초월한다. 고문당한 사람들은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탄압은 힌두교도들에게도 고통을 안겨 주었다. 10만 명 이상의 힌두교도들이 폭탄 공격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 카슈미르를 떠나야 했다.

게릴라 투쟁이 시작되고 나서 6년이 지난 1995년에 정신 이상자는 1989년보다 20배나 많아졌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카슈미르를 통치하는 한 그 지역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카슈미르인들이 인도의 점령에 맞서 싸우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지배자들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다. 그들은 카슈미르 민중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카슈미르의 파키스탄 편입을 위해 무장조직들을 만들고 지원해 왔다. 파키스탄 정부는 또 발루치스탄이나 북서 변경주, 아자드 카슈미르 같은 자국 내 소수 집단들을 탄압해 왔다. 이슬람교의 일파인 시아파도 탄압 대상이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카슈미르를 통치하는 한 그 지역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데올로기 효과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배자들은 모두 카슈미르의 독립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둘 다 카슈미르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지도 양보하지 않는다.

인도가 카슈미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지역이 인도의 북부 방어선에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히말라야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카슈미르 계곡은 인도를 침공하는 북쪽 침입로가 될 수 있다. 스리나가르가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델리다.

그러나 인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이지, 파키스탄이 아니다. 1962년에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패배해 카슈미르의 북동쪽 끝 지역(라다크)을 중국에 빼앗겼다.

오히려 파키스탄은 인도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 인도의 인구는 파키스탄의 7배, 생산력은 8배, 화력은 5배 이상이다. 핵무기를 고려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카슈미르 지역이 파키스탄에 중요한 것은 전략적 위치 때문이 아니다. 인도가 침공할 때든 러시아나 중국이 파키스탄을 침공할 때든 카슈미르는 특별히 중요한 통로가 아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을 침공하려 한다면 약 2천9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선 어디서든 쉽게 공격할 수 있다.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에 중요한 것은 주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지배자들은 “힌두교도의 지배”에서 “무슬림”을 구출하기 위해 파키스탄 국가가 존재한다고 공언하면서, 인도가 카슈미르를 계속 지배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모욕을 국내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다. 그들은 카슈미르를 점령하고 있는 인도군과 힌두교도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파키스탄의 종교적·사회적 통일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도 카슈미르 분쟁은 동일한 효과를 낸다. 즉, 무슬림을 적대시 하면서 무슬림과 힌두교도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지금 인도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수는 파키스탄의 무슬림보다 더 많다.

1947년 독립 전에 인도의 무슬림은 모든 사회 계급에 걸쳐 존재했지만 지금은 억압당하는 소수로 전락해, 힌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 1998년에 극단적인 힌두 민족주

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인도에서도 카슈미르 분쟁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점차 중요해졌다. 인도의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인도인민당)은 오는 2월에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선거를 앞두고 있다. 1억 6천만 명이 거주하는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인도 최대의 주일 뿐 아니라 인도인민당의 핵심 근거지이기도 하다.

인도인민당은 인종 차별을 이용해 국내의 저항을 비켜가고 무슬림에 대한 폭력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의사당 테러 사건 전에 인도인민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그들이 카슈미르를 포기하거나 카슈미르에서 퇴각한다면 선거에서 참패하기 십상이다. 그것은 아쌈이나 편잡 같은 다른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들을 더한층 가속시키는 결과도 낳을 것이다.

파키스탄의 무사라프는 1999년 10월에 집권하면서 2002년 10월 민정 이양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파키스탄 군부가 만들고 키워 온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군부 내에 불만 세력을 만들어 냈다.

이제 탈레반 정권은 사라졌고 무사라프는 미국과 인도의 압력 외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전투적인 이슬람 조직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강경 이슬람 무장조직 활동가들을 대거 체포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그는 카슈미르 분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에도 시달리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군부 내에서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고, 2년 3개월 전에 나와즈 샤리프 총리를 쫓아냈던 군사 쿠데타가 재발해 자신을 권좌에서 몰아낼 수도 있다.

오늘날 카슈미르의 민중에게 자유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하게 진보적인 대안은 힌두교도와 무슬림, 인도와 파키스탄 민중 간의 우애와 단결이다. 지금 카슈미르 통제선 양쪽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 지배자들 대신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그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카슈미르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인도나 파키스탄 가운데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국 지배자들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카슈미르 민중의 진정한 대안이다. 

인도나 파키스탄 가운데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국 지배자들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카슈미르 민중의 진정한 대안이다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서 배운다

김덕엽

[편집자 주] 미국이 석 달 넘게 아프가니스탄과 벌인 전쟁은 일단락된 듯하다. 하지만 조지 W 부시가 연두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듯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반전 운동 역시 계속되고 있다. 부시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베트남 반전 운동을 되짚어 봄으로써 반전 운동을 통해 미국 제국주의를 패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약 4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이 조그만 농업 국가인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다. 미국이 베트남을 파괴하기 위해 7백만 톤의 폭탄 — 제2차세계대전 동안 투하한 총폭탄 량의 두 배가 넘는다 — 을 투하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베트남 전쟁 초기에 미국의 반전 운동가들은 맹목적인 국수주의 열풍과, 미국의 군사 개입 확대를 정당화하는 선전 공세에 시달렸다. 1965년 여름 수백 명이 워싱턴에서 반전 행진을 했는데,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쟁 지지자들의 야유와 붉은 페인트 세례를 받아야 했다.

초기 반전 운동의 규모는 보잘것 없었다. 1968년에는 반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무엇인가가 당신에게서 솟아나고 있다. … 포기하지 마라.”고 말하게 될 프랑스의 급진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조차도 1965년에는 미국의 반전 집회 연설 부탁을 거절했다. 당시 사르트르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정치적 비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므로 집회 연설은 완전한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1965년에 미국 정부는 20만 명 이상의 미군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전면전이 시작됐고 미국은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로 베트남을 폭격했다. 개전 초기에 <뉴욕 타임스>는 폭격으로 “베트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네 명 중 세 명”은 베트남 병사들이 아니라 “마을 부녀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차차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전쟁에 대한 의문은 주로 대학가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정치적 논쟁에 참

여했다. 미시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3천 명, 버클리 대학(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는 3만 명이 토론회에 참가했고 수십만 명이 참가한 워싱턴의 전국 규모 토론회는 1백22개 대학 방송국을 통해 전국에 중계됐다. 거둬지는 토론회에서 정부 대변인들은 참전을 문제 삼는 질문 공세에 시달렸고 논쟁에서 계속 패배했다. 처음엔 전쟁을 지지하거나 정치에 관심 없던 학생들도 토론이 끝날 무렵에는 반전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게 됐다.

전쟁 지지 주장의 허점이 드러날수록 반전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났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수였다. 반전 운동은 여전히 정부의 전쟁 노력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미국 정부는 더 많은 병력을 베트남에 투입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수록 미국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1966년에 20만 명이 추가 파병됐고 1968년 초에는 50만 명 이상의 미군이 베트남에 주둔했다.

베트남 주둔 미군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을 징병해야 했다. 1965년 12월 징집 인원은 1950년대 초 한국 전쟁 이래로 가장 큰 규모였다. 대학생들마저 징집 대상이 되자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징집 거부 서명을 했다. 50만 명 이상이 실제로 징집을 거부했고, 약 20만 명이 기소됐으며, 3천여 명 정도가 징집을 피해 달아났다. 징집기피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만 8천7백50명이었다.

초기 반전 운동은 막강한 정부에 맞서 이길 희망이 라곤 없어 보였다. 그러나 전쟁의 진실이 드러나자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민간인들이 대량 학살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부패한 사이공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고위 관리

전쟁 지지 주장의 허점이 드러날수록 반전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났다

들의 거짓말이 폭로되자 반전 운동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1967년 4월에는 뉴욕에서 4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1년 전보다 여덟 배가 늘어난 것이었다. 런던에서는 9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위대한 승리

1968년 1월 말에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군대는 구정 공세를 감행했다. 남베트남 전역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았다.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군대는 36개의 주요 도시를 공격했고 미국 대사관을 잠시 점거했다. 구정 공세는 군사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도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파괴할 수 없음도 드러났다. 또, 베트남 민중의 사기와 투지를 꺾지 못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반전 운동 참가자들은 더욱 고무됐다. 하룻밤 사이에 반전 시위대가 세 배로 늘어나기도 했다. 영국 노동당 소속 총리 해럴드 윌슨은 1968년에 시위대의 규모에 놀라 영국군의 파병을 포기했다.

미군 4만 명이 죽고 25만 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늘 반전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이봐 존슨, 오늘은 애들을 몇 명이나 죽였냐?” 하고 분노 섞인 조롱을 퍼부었다.

이것은 전반적 변화의 일부였을 뿐이다. 1965년 8월에는 61퍼센트의 미국인이 전쟁을 지지했다. 그러나 1971년 5월에 이르면 61퍼센트가 전쟁에 반대했다.

몇몇 도시의 선거는 노동계급 내에서도 반전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자동차 제조업으로 유명한 미시간 주 데어본에서는 이미 1967년에 41퍼센트가 미군 철수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 병사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출신의 지원병이나 징집병이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가난한 베트남 국민들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것에 반대했다. 1970년 11월 노동계급 도시 디트로이트에서는 63퍼센트가 전쟁에 반대했다.

반전 분위기는 전선에까지 퍼져 나갔다. 1969년 10월 미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베트남 파병 미군 병사들은 시위를 지지하는 표시로 검은 완장을 착용했다. 병사들은 반전 기사가 실린 지하 신문을 참호 속에서 읽었다. 1970년에 미국 내외에서 발행되던 지하 신문은 50종류가 넘었다. 70만 명의 군인들이 불명예 제대를

했다. 탈영병의 숫자는 1967년 4만 7천 명에서 1971년에는 8만 9천 명으로 두 배가 늘어났다.

집권 민주당은 분열했고 선거에서 패배했다. 1968년 가을, 베트남에서 미국을 구출하겠다고 약속한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새로운 정부가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발표하자 반전 운동은 주춤해졌다. 그러나 닉슨은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 북베트남 폭격은 더 강화됐다. 1970년 4월에 전선은 캄보디아로 확대됐다.

미국 전역은 다시 항의 시위로 달아올랐다. 더 강화된 용단 폭격과 1971년 초 라오스 침공은 엄청난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워싱턴에서 50만 명, 샌프란시스코에서 3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군복 입은 병사들도 시위에 참가했다. 미국 정부는 1972년 초 15만 명 남짓 되는 미군만 남기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래도 반전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반전 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워싱턴에서는 75만 명이 반전 시위에 참가했고 런던에서는 10만 명이 행진했다. 거대한 반전 운동 덕분에 베트남 전쟁은 패배로 끝났다. 이것은 미국이 맞본 최초의 패배였다.

지난 몇 달 간 세계적으로 반전 운동이 일어났다.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성장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폭격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은 즉시 대중 운동으로 성장했었다. 미군은 베트남 전 때와 똑같은 방식에 의존했다. B52 용단 폭격과 끔찍한 ‘테이지 커터’ 폭탄에 크루즈 미사일의 ‘정밀’ 폭격이 첨가됐을 뿐이다.

만일 미국이 다른 나라로 전쟁을 확대한다면 지금은 30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전 운동을 건설할 수 있다. 중동에서는 대중의 반미 감정이 더 고조돼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정권은 반란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베트남 전쟁이 남긴 패배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전쟁의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때도, 지상군을 파병해야 할 때도 베트남 증후군을 의식한다. 또, 한번 시작한 전쟁은 짧은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은 대규모 반전 운동이야말로 야만적인 전쟁을 끝낼 수 있음을 보여 줬다. 

■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하워드 진의 《오만한 제국》(당대)과 《미국민중저항사》(일월서각)를 보시오.

만일 미국이 다른 나라로 전쟁을 확대한다면 지금은 30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전 운동을 건설할 수 있다

월드컵과 정치

김인식

축구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3대 프로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영국), 세리아A(이탈리아), 프리메라 리가(스페인)를 보며 열광한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때는 연인원 3백 10억 명이 TV를 통해 월드컵 경기를 시청했다.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것은 축구를 보며 다소간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축구 경기장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좀체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전 세계를 유린하는 미국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의 약소국들(카메룬,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에 패배할 수 있다. 또, 전반전 내내 고전하던 팀이 후반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또, 빈민가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들(펠레, 마라도나, 호나우두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기 때문에 축구는 흔히 지배자들의 유용한 지배 수단으로 이용되곤 했다. 고대 로마의 지배자들이 콜로세움(노천 원형 극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음식과 오락을 제공해 대중의 불만을 달랬던 것처럼 말이다.

언뜻 보기에 김대중의 숨통을 바짝 죄고 있는 권력 기관들의 부정 부패와 월드컵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대중에게는 이 둘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김대중은 월드컵에 대한 열광이 권력 기관들의 부패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누그러뜨려 주기를 바란다. 그 때문에 권력 기관들의 부패에 대해 세 번이나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던 1월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은 “한국 월드컵 팀이 이번만은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드컵의 창시자 줄 리메는 “축구야말로 계급이나 인종의 구분 없이 모두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 세계를 행복한 한 가족으로 단합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월드컵의 역사는 각국 지배자들이 월드컵을 억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음을 보여 준다.

1962년 칠레의 호르헤 알레한드라 정권은 경제 위기

가 낳은 인플레이와 생활 수준 하락에 반발하는 격렬한 파업을 무마하는 데 월드컵을 이용했다.

1966년 영국의 해럴드 윌슨 노동당 정부는 출범한 지 2년도 안 돼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했다. 윌슨 정부는 국민들이 온통 자국의 월드컵 우승에 관심이 쏠리는 틈을 타 임금을 동결했다. 윌슨은 자국의 승리 군단을 대중적 분노의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1976년 쿠데타로 집권한 호르헤 비델라 아르헨티나 군사 정부는 1978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월드컵을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적극 이용했다. 군사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우승이 군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승부 조작까지 했다. 군사 정부가 준결승전에서 페루를 매수해 아르헨티나는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었고 결국 우승했다.

펠레는 월드컵이 이렇게 억압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항의해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을 끝으로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971년쯤 해서 나는 조국의 실정에 대해 진실의 일부나마 알게 됐습니다. 고문, 살인, 실종 등. 나는 군부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은 브라질 대표 유니폼을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은 국가 대항전이다. 각국 지배자들은 월드컵을 이용해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고 민족주의(국가주의)를 부추기려 애쓴다. 그 때문에 월드컵은 종종 국가 간 경쟁과 폭력으로 얼룩지곤 했다.

제1회 월드컵은 1930년에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렸다. 결승전에서 홈팀인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와 이겼다. 몬테비데오에서는 며칠 동안 우승을 자축하는 축제가 벌어졌다. 그러나 국경 너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아르헨티나인들이 도로로 뛰쳐 나가 우루과이 영사관에 돌을 던졌다. 그 때문에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

1969년 멕시코 월드컵 지역 예선전에서 맞붙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경기는 경기장 밖 전쟁(5일 전쟁)으로 번져 수천 명이 사망했다.

지배자들이 부추기는 월드컵 광기는 개인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자살골을 넣은 콜롬비아 수비수 에스코바르는 월드컵이 끝난 후 메이인 교외 라스 팔마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나오다 총알 세례를 받았다.

FIFA, 월드컵, 다국적 기업

월드컵을 주관하는 국제 축구연맹(FIFA)은 추악한 협잡꾼들의 사교장이다. 24년 동안(1974-1998년) FIFA를 지배한 중앙 아벨란제는 FIFA 역사상 유례 없는 금권 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됐다.

아벨란제는 파시즘과 군부 독재에 매우 관대했다. 그는 1936년에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 때 독일에서 보낸 시간은 유익했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벨란제는 제3세계의 본선 진출 확대를 미끼로 제3세계 나라들이 1980년 올림픽 위원회 선거에서 사마란치를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사마란치는 십대 때부터 파시즘 운동에 가담했던 파시스트였다. 이 자는 1975년 스페인의 프랑코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36년간 그 정권에 충성했다.

1978년에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에 항의해 월드컵 개최지 변경을 요구했을 때 아벨란제는 냉담하게 거부했다.

아벨란제는 포르투갈의 독재자 안토니우 살라자르 정권의 재무장관이었던 루이스 핀투가 국고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인 오르백의 이사이기도 했다. 이 회사는 볼리비아의 우고 반세르 군사 정권과 결탁했다.

현 FIFA 회장인 제프 블래터는 아벨란제의 정신적 상속자다. 블래터는 “현 상태의 유지와 지속”을 약속했다. 달리 말해, 전임자 아벨란제의 추악한 방식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축구는 스포츠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애초에 축구는 미래의 은행가, 공장 소유자, 제국 행정관이 될 청년들의 스포츠였다. 이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자치 능력, 독창성, 자기 규율이 요구됐다.

축구가 대중 스포츠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후반이었다. 초기 영국 축구 팀들은 새로운 도시 노동 계급 거주지에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던 교회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축구 팀의 4분의 1이 교회와 관련돼 있었다.

산업 자본가들은 축구의 이점을 재빠르게 간파했다.

월드컵, 누구의 잔치인가? 월드컵의 마피아들이 축배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월드컵 조직위원장 이연택, 정몽준, FIFA 회장 제프 블래터, 일본축구협회장 오카노 순이치로)

19세기 중엽부터 자본가들은 산업혁명기의 착취 방식에서 탈피해 점점 더 (반)숙련 노동을 필요로 했다. 이를 위해 얼마간의 교육과 적절한 식사와 여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했다. 토요일 오후 휴무는 대중 스포츠의 길을 열었다.

축구가 상류층에서 노동 계급으로 확산된 것은 “모범적인” 노동 계급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용주들은 축구 등의 스포츠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노동에 적합한 규율을 부과하고 싶어했다. 그 결과, 아스날 팀은 울리지의 로얄 아스날(왕립 병기 창고) 노동자들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은 랭커셔와 요크셔 철도 노동자들로, 웨스트 햄 유나이티드 팀은 탬즈 철강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오늘날 축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기에 거대한 사업이 됐다. 이것은 축구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을 뜻한다. 노동자들이 축구를 즐기고 때때로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축구는 언제나 자본가 계급이 통제하고 지시하는 프로 스포츠다.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거대한 상품이다. FIFA는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JVC, 후지, 캐논은 1994년 미국 월드컵의 공식 후원 업체들이다. 소니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결승전 때 마케팅 독점권을 따냈고, 텐즈는 국제스포츠레저(ISL) 주식의 49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ISL은 월드컵의 마케팅과 중계권을 독점 대행하는 업체로서, 다국적 기업인 아디다스가 FIFA와 밀실 거래를 해 설립했다.

코카콜라는 월드컵 2002와 월드컵 2006의 청량 음료 스폰서가 되는 특권으로 10년 동안 1억 달러(약 1천 3백억 원)를 지급했다. 아디다스는 10년 동안 1억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IFA와 계약을 맺었다. FIFA는 그 대가로 심판복에 아디다스의 삼색선 상표를 부착하게 했다.

시간이 늘어나 공식 후원사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겠지만, 선수들은 부상의 악몽에 시달린다.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므로 그만큼 부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나우두(브라질)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무릎 부상인데도 경기를 뛰어야 했다. 호나우두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나이키와 맺은 계약 조건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봉유병 환자처럼 어슬렁 거려야 했다. 호나우두는 그 후유증으로 3년 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 선수들은 37도까지 오르는 찜통 더위 속에서 경기를 치렀다. 미군의 훈련 교범 초차 기온이 30도가 넘으면 훈련 중지를 권고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멕시코 월드컵 위원회는 유럽 텔레비전 방송 시간에 맞추기 위해 선수들을 희생시켰다.

축구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월드컵은 뇌물, 승부 조작, 판정 시비, 다국적 기업들의 돈벌이, 마약 밀매, 경기장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 노동자들은 멋진 축구 경기에 열광하다가도 월드컵의 추악한 실상에 환멸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월드컵에 매료되는 노동자들의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지배자들이 월드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 지배자들이 노동 계급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이용하는 인종주의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2002년 한일 월드컵도 다국적 기업들이 협찬하고 있다. 아디다스, 후지 제록스, 버드와이저, 질레트, 마스터카드, 필립스, 맥도날드, 아바야, 후지 필름, 야후, 도시바, KT, 현대자동차. 월드컵 브랜드 독점권으로 공식 협찬사가 지급한 평균 액수는 4천만 달러(약 5백20억 원)다.

이들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축구 규정을 바꾸고 경기 수를 늘린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방송국들은 0대 0 무승부가 되면 국내 시청자들이 TV 시청을 외면할까 봐 걱정했다. 그래서 더 많은 골이 터질 수 있도록 골대 크기를 늘렸다. 심지어 광고주들의 광고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전후반 경기를 4쿼터 경기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공식 협찬사들의 이윤을 위해 월드컵 출전국 수가 확대됐다. 애초 16개국이던 본선 진출국 수가 지금은 32개 국으로 늘어났다. 경기가 많아지면 기업체들의 광고

홀리건

‘안전한’ 월드컵을 위해 경기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홀리건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배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홀리건을 마녀사냥한다.

대부분의 홀리건은 실업자나 노동 계급 사람들이다. 비통한 삶에 대한 분노가 경기장 난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홀리건이라는 용어도 1960년대 초 영국 보수당 정권 하에서 사회복지 축소, 빈부격차 심화에 반발한 실업자와 빈민들이 축구장에서 울분을 터뜨리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비롯됐다.

폭력은 때로 인종주의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배자들은 늘상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다른” 나라나 “다른” 인종이라고 떠들어댄다. 월드컵이나 국제 대회 같은 국가 간 대항전 때 언론들은 “우리” 팀이 상대 팀을 무찔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그러다 보니 패배한 팀의 응원단들은 상대 팀 응원단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분풀이한다.

따라서 지배자들이 홀리건의 경기장 폭력을 비난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지배자들은 단지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 더 커다란 폭력으로 대응한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은 경기장 폭력을 막는다는 구실로 경기장 밖에 탱크를 대기해 놓았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영국과 네덜란드 경기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6천 명의 경찰을 투입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게 버렸다.

그러나 경기장 난동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는 영국과 튀니지가 맞붙은 마르세이유와, 독일과 유고슬라비아가 겨룬 랑스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홀리건의 경기장 난동은 가난한 사람들의 억눌리고 소외된 현실을 왜곡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물론 홀리건의 난동이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 양심적 병역 거부자 오태양 씨 인터뷰 ·

오태양 씨(28세)는 '불살생과 생명 존중'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봉사의 인생관에 따른 양심적 결단으로 군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다. 그는 지난 12월 17일 논산행 기차에 몸을 싣는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 '아침을 여는 집'에서 민간대체봉사활동에 들어갔다. 군사 훈련 대신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오태양 씨를 찾아 갔다.

강철구 정리

Q 군 입대를 거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A 신병 훈련소에서 총을 들지 않아 항명죄로 구속돼 3년의 감옥 생활을 한다는 여호와 증인의 이야기는 내 존재를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자욱히 베어 나오는 눈물 어린 수기들을 읽어 내려가며, 제 가슴과 눈에서도 켜없는 통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로지 '살인하지 않겠다'는 개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보다 훨씬 부당하고 가혹한 3년의 감옥 생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물론, 출소 후에도 범죄자와 종교적 이단자라는 멍에를 지고 편견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기구한 삶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아팠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제 양심에 따라 병역 거부를 선언함으로써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라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문제를 이사회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Q 국방부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과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게 된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A 국방부의 주장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60만 현역 장병 중 20만 명 가량이 비전투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15만여 명의 군입대자 중 절반에 달하는 7만여 명 정도가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비전투 분야

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판 대체복무'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요구하는 민간대체복무제도 사이의 차이는 4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느냐 여부에 있습니다. 매년 6백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단지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범죄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소수자의 인권도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인권 중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21세기에는 개인의 인권이 더 많이 보장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다른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A 독일에서는 1945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보장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널리 인정되고 있죠.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도 2000년에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대체복무제는 모병제로 가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들이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Q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감옥행도 마다 않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총연합회는 “이단에 대한 특혜 입법”이라며 대체 봉사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의 증인은 “이단”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1천6백여 명의 여호와와의 증인 신자들이 추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도, 종교계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모든 종교는 전쟁과 살생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계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험난한 길을 걸었던 1만여 명의 여호와증인 신도들은 그 동안 말 못 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병 훈련소에서 구타당해 사망하거나 불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는 종교 활동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병역 기피자”와 “범죄자”라는 낙인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취직도 힘들고, 심지어는 대학에 복학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산 병무청 직원 15명 가량이 병역 거부자의 집에 들이닥쳐 강제로 입대시키려고 했습니다. 강제 입대는 불법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보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광신도”, “종교적 이단”, “병역 거부자”라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입니다. 종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 여호와 증인 신도들에 대한 편견과 냉대가 존재합니다.

Q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A 작년 3월부터 연대모임이 있었습니다. 1월 24 일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과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종교 NGO 네트워크 등 인권·평화·시민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적 서명 운동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군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동료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A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연대의식을 느낍니다. 저는 전쟁과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자발적 동의에 따른 선택으로 군대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의적 동기로 군복무를 마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크죠. 이런 불만이 군가산제에 대한 지지로 엉뚱하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일부 예비역들은 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군사 문화의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되죠.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면서 확일적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군사 문화를 고쳐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군대 갈 사람들은 군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인간은 자기 신념대로 살 때 행복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인 여호와 증인 신자들은 자기 삶과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도 헤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당장 인권을 유린당하는 분들에 대한 구제가 시급합니다. 양심에 따라 산다는 죄로 하루에 2~3명씩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게이트 공화국과 부패 검찰

정병호

4년 전 “정경유착으로부터 기업을 해방”시키고, “부정부패로부터 우리 사회를 단절”시키겠다던 김대중의 약속은 완전히 위선이었음이 드러났다. 김대중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의 부패 정권”으로 기억될 판이다.

정권 초기부터 옷로비·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김태정 법무부 장관·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지만, 이것은 최근 연일 터지고 있는 3대 게이트(진승현·이용호·윤태식 게이트)에 비하면 ‘새 밭의 피’다.

3대 게이트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메들리 노래’가 따로 없다. 어제는 이용호, 오늘은 진승현, 내일은 윤태식. 매일 새로운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고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사탕’ 마냥 걸려들고 있다.

진승현 게이트에는 신광옥 전 법무차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뿐 아니라 김대중 아들 김홍일과 김홍업이 연루돼 있다. 진승현이 불법대출한 2천3백억 원 중 일부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용호 게이트는 회랍 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여럿 달린 괴물 히드라처럼 금감원·국세청·국정원·검찰·민주당·조폭이 뒤엉킨 권력형 비리 사건의 종합판이다.” 김홍일은 여기에도 연루됐고,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은 금감원·자산관리공사·검찰 로비용으로 거액을 받았다. 신승환의 수첩에는 로비 대상 검사들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윤태식 게이트는 가히 메가톤급 폭탄이다. 부패방지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성남이 도리어 부정부패에 가담해 부패척결은 우스꽝스러운 희극이 되었다. 정권의 “입”노릇을 하던 박준영 국정홍보차장과 김정길 전 청와대 정부수석, 박지원 전 공보수석, 그리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까지 살인범 윤태식의 전방위 로비망에 줄줄

이 엮였다. 거기에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들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까지 로비의 손길이 뻗었다.

부패정권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국가 권력 핵심 기구가 모두 비리에 연루돼 김대중 정권 자신이 부패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김대중 정권은 출범 당시, 정경 유착을 통해 성장한 재벌이 경제를 망쳐왔다면 재벌 대신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력만 갖춘 벤처기업은 성공할 수 없었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식 투기와 정치권 로비 등의 편법이 필요했다.

결국 쇠고랑을 찬 벤처 기업가들은 하나같이 IMF 위기 이후 정권이 부추긴 벤처기업 붐에 편승해 불법 대출, 주가 조작 등을 저질러가며 사업을 확장했다. 이런 식으로 폐돈을 번 사업가들은 “비약적인 사업 팽창에 따른 ‘보호막’ 형성을 위해” 서로가 정권의 핵심 실세와 연관 맺으려고 전방위로 로비를 펼쳤다.

이러다 보니, 이 정권 하에서 부패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

살인마 윤태식과 그의 후견인

부패국민연대의 조사 결과,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90퍼센트 이상이 “우리 사회는 부패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대중은 지난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체의 부패를 가차없이 척결”하겠다고 말했으나 이제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검찰·안기부 같은 핵심 국가 기구가 연루된 이번 사건으로 김대중 정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특히 검찰이 이용호·진승현 게이트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각 게이트 수사에서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 같은 브로커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검찰은 그들이 출국한 뒤에야 출국 금지를 발표할 정도였다. 대중의 높은 분노 때문에 검찰총장 사퇴라는 교육지책을 택한 김대중은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통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은 특검제 상설화라는 대중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부패한 검찰이 스스로 개혁될 수 없다. 게이트의 몸통 중 하나인 검찰은 부패 사건을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김대중에 맞선 투쟁

김대중 정권은 완전히 부패한 정권이다. 도대체 이런 정권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정권은 퇴진돼야 마땅하다.

1998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는 극심한 실업난과 물가 인상, 그리고 대통령 수하르토와 그 일가의 부패에 분노하던 민중이 독재자 수하르토를 퇴진시켰다. 2000년 필리핀의 에스ตรา다도 부패 추문에 시달리다 퇴진했다.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관료들의 부패 스캔들이 대중적 불만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도 정권 자신이 부패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불만이 광범하다. 게다가 정권의 레임덕과 지배자들의 분열 때문에 그들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버둥칠수록 더욱더 깊은 늪에 빠지는 형국이다.

실제로 이번 3대 게이트가 폭로되고 수사가 진행된 것 자체가 이런 정치 위기의 결과물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권력 핵심부가 연루된 이 비리들을 덮는 데에 안간힘을 썼다. 검찰은 비리 수사 결과를 비밀에 부치거나, 관련자가 더 밝혀지기 전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10·25 재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김대중



정부는 상황을 통제할 힘을 급속도로 잃었다. 한나라당이 이 기회를 이용해 덮어둔 이용호 게이트와 진승현 게이트를 되살려 내면서 김대중 정권은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은 윤태식 게이트로 진승현 게이트에 ‘맞불 작전’을 펼쳤지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정권의 위기만 심화시켰다. 이 사건은 원래 수지김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한 당시 안기부 수사관 한나라당의 정형근을 비롯한 구 여권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역시 이 사건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패스 21’을 비호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완전히 ‘제 무덤 제가 판 격’이 돼 버렸다.

이렇게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은 노동자들이 싸우기 좋을 때다. 노동자 운동이 부패 문제 같은 정치 쟁점을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 생활상의 요구들과 결합시켜 투쟁을 벌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지난 여름 민주노총의 파업이 지지부진하게 끝나고 단병호 위원장이 자진 출두하면서, 전국적인 차원의 노동자운동은 다소 주춤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지금은 부패 정국이 만들어 놓은 유리한 정세 때문에 노동자 투쟁들이 발전하고 승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배자들은 현 정치 위기의 극복 방안을 두고 더욱 분열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작년 4월 대우차 폭력 만행과 같은 정치적 실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부패 정권에 환멸을 느낀 대중은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지난 50년간 일당독재를 자행하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장본인인 한나라당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사회에서 민주 개혁을 가져올 진정한 힘은 대중 투쟁에 달려 있다. 대중 투쟁 속에서 부패한 기성 정당과 다른 새로운 대안 — 진보정당 — 을 건설하는데 주력할 때다. 

노무현은 민주 개혁가인가

임미정

일부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노무현 지지 쪽으로 이끌리고 있다. 강준만 교수에 이어 영화배우 문성근과 명계남 등이 노무현을 공개 지지했다. 이들은 국민경선제로 노무현이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고 노무현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문성근은 “지역감정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마 한나라당만이 민주주의와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보는 듯하다. 이것은 노무현의 지론이다.

노무현은 한나라당 때문에 김대중 개혁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전환기, 과도기란 본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지역 정권이란 한계도 있고 ... 또 수구세력의 강력한 저항과 훼방이 있지 않았습니까?”(《민족21》, 2001년 12월호)

최근 박근혜 같은 TK 세력들이 세력을 과시하려 들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패권적 영남 지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볼 만하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누더기가 된 주5일 근무제조차 “시기상조”라며 반대할 만큼 반노동자적이고 반개혁적이다.

그러나 이런 의문이 든다. 4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 온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에서 제외될까? 민주당은 선거에서 지역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신승환이 한나라당 당사에 찾아가 이용호 구명 운

동을 했는가? 김대중 정부 아래 벌어진 부패 스캔들의 정점에는 늘 민주당의 실세가 있었다. 김영삼과 꼭 마찬가지로 김대중의 세 아들들도 추문에 연루되어 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 못지 않게 기득권 유지와 이권 쟁취에 바빴다.

노무현이 수구 세력 핑계를 대는 진정한 속내는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군말 없이 김대중을 따라주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강준만 교수는 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정권에게는 카드가 없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한 쪽에선 외국자본 앞잡이 노릇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또 다른 한 쪽에선 사회주의, 포퓰리즘 한다는 정반대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협공을 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는 심지어 민주노동당과 진보 진영을 노무현 물어뜯기를 하는 “한나라당의 2중대”라고 비난한다.

실사 김대중이 수구 세력에 밀려 움썅달썅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가정하자. 그럴 때마다 김대중의 대응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수구 세력의 압력에 밀려 좌파와 노동 대중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 사례는 셀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고수, 개혁 입법 좌절, 주5일 노동제 후퇴, 새만금 간척 사업 강행 등등.

강준만 교수도 자기 주장의 모순을 인정한다.

“정권은 정말 미련했죠. 왜 진보세력, 노동자세력을 ‘적’으로 만듭니까. 수구세력한테 당하는 정권이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왜 하나요. 차라리 진보세력, 노동자세력을 끌어안았어야죠.”

강준만의 말대로 김대중은 진보 세력이 아니라 수구 세력을 자신의 파트너로 삼았다. 왜냐하면 김대중과 수구 세력은 모두 자본가 계급의 기득권 유지라는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타파

노무현이 영남 지역의 반(反)김대중 정서(영남 지역

주의) 때문에 개혁이 좌절됐다고 보는 것은 반김대중 정서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주장이다.

김대중 집권 초기에만 해도 경상도 지역에서 김대중에 대한 반감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

선거 직후인 1998년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63.9퍼센트, 부산·경남의 77.8퍼센트가 “김 당선자의 당선이 결과적으로 나라를 위해 잘된 일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 1997년 12월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대구·경북의 77.8퍼센트와 부산·경남의 86.6퍼센트가 잘된 선거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K 성당 신부가 미사를 지내면서 김대중 당선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자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됐다. 술좌석에서도 당선자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경상도에서 민심이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는 삼성자동차 부도 사태였다. 이것을 계기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계급적인 반감이 형성됐고 한나라당은 이런 반감을 이용해 지역주의를 조장했다.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경우 김대중에 대한 노동자들의 쓰라린 환멸이 한나라당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 대중의 환멸이 모두 수구적·패권적 지역주의의 정서는 아니다.

집권 초기 대다수 사람들은 김대중이 당선되면 지역주의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김대중도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측근들로 권력 핵심을 채웠다. 검찰총장은 대선 당시 김대중의 비자금 수사를 유보했던 광주출신의 김태정을 앉혔고, 안기부의 1차장과 2차장과 기조실장 세 요직이 호남 출신에게 돌아갔다.

김대중 집권 기간 내내 검찰에서는 목포고와 광주출신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김대중의 집권 4년은 호남 지배자들과 영남 지배자들이 권력을 번갈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지역주의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자신들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분노가 커질수록 이들은 지역주의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 애쓰는 경향이 있다.

단순한 권력의 지역 안배로는 지역주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지역주의를 부추겨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지배계급 전체에 맞서 노동자들이 싸우는 방식으로만 지

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노무현과 링컨

노무현은 최근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통해 “동서간의 통합이 없이는 개혁도 통일도 불가능하다. … 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고 주장한다.

그는 남북 전쟁을 통해 미국의 통합을 이루어냈다는 링컨과 자신을 독자들이 같은 반열에 놓기를 바란다. 아마 이 책의 독자들은 링컨이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고 변변한 학벌 없이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다는 이유로 부지불식간에 링컨과 노무현의 이미지를 겹쳐서 떠올릴지 모른다.

노무현은 링컨이 노예제 폐지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에서 중용의 미덕을 발휘한 현실주의자임을 강조한다. “링컨은 현실이 어떻든 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조금한 개혁주의자가 아니었다.” “링컨은 우선 노예제가 정의에 어긋나는 악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법으로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링컨의 생각이었다.”

어디서 많이 들던 말 아닌가? 그의 말을 듣노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질질 끌면서 온갖 핑계를 대듯이 링컨도 말만 앞세우는 타협론자였음이 부각된다.

비록 링컨이 노예 해방보다 미국 연방의 통일을 정치적으로 더 중시했지만 어쨌든 남북전쟁은 자본주의 발전의 걸림돌인 노예제를 폐지함으로써 역사적 진보를 가져왔던 사건이었다. 남북전쟁을 계기로 노예들은 신분적 해방을 통해 임금 노동자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 미국은 급속하게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지금의 영호남 지역갈등과 미국 남북전쟁은 급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

남북전쟁의 위대한 역사적 의의 때문에 영국 맨체스터의 먼방직 노동자들은 링컨의 남부 무역 봉쇄로 면화 사업이 붕괴해 실업의 위기에 처해진 상황에서도 북군의 승리를 기원하고 노예 해방에 지지를 보냈다. 마르크스도 링컨의 재선을 축하하며 “링컨의 재선이 곧 노예제의 종말을 고하는 위대한 포고”라는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한때 인권 변호사였다고는 하나 노무현은 “김대중 정부에서 인권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김대중 추종자이다. 

2002년 양대 선거와 민주노동당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1. 20대는 보수층인가?

20대가 보수화됐다고 한다. 학생운동이 죽었다고 한다. 대학마다 총학생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투표율 50퍼센

트를 채우기 위해 편법(?)까지 써야할 정도라고 한다. 총학이 주최하는 등록금인상반대 집회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집회 투쟁은 한 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사회운동사는 학생운동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우리의 경우 이승만 독재 정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청년 학도들이 역사 발전의 불길을 지펴 왔다.

4·19세대, 6·3세대, 386세대라는 말은 청년 학도들의 운동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용어를 넘어서는 뜻을 담고 있다.

사회로부터 역사의 훈장을 자연스럽게 받아 온 학생운동의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가? 20대는 정말 보수화됐는가? 학생운동은 정말 죽었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20대의 보수화 탈피는 어려운 것인가. 학생운동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어려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작업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그 어려운 사업을 민주노동당이 올해 본격적으로 벌이려 한다.

민주노동당의 올해 사업 중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청년 학도를 일으켜 세우는 사업이다.

2. 누가 20대를 보수화시키려 하는가?

대학생들의 저항이 요구되는데도 학생들이 잠자고 있으면 대학은 생명을 잃게 된다. 저항은 청년 학도의 생명이다. 대학생들은 지금 '취업'이란 것에 가위눌려 꿈작달작

못 하고 있다.

청년 실업은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을 현혹시키는 '20대 벤처 기업가', '대학생 벤처 기업가'라는 신기루가 대학 사회를 사로잡고 있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국가 정보 기관과 작당해 죽인 아내를 간첩으로 만들어 그의 살인 행위를 북한의 만행으로 조작한 자가, 가장 성공한 벤처 기업가로 인정받아 대통령과 여러 장관과 언론의 찬사를 받아 온 것은 우리 벤처 업계가 얼마나 허상에 차 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대학생들은 '정보화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에 빠져들어 자신들의 목을 옥죄고 있는 취업난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파헤쳐 근본 문제를 풀 생각은 않고 흐느적대고만 있다.

취업난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판치고 있어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요소인 대량해고로 취업난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대량해고를 포장한 용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올해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그 투쟁 공간이 양대 선거 무대다. 선거의 장을 통해 신자유주의 본질을 파헤치고 민중들을 투쟁대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3. 2002년이 분수령이다

2002년은 노동자·농민·도시 빈민 등 민중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해다.

지난 어느 해보다도 생존권 쟁취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야 할 상황인데 투쟁의 목소리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지방선거, 대선에 파묻혀 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별써부터 TV화면은 월드컵과 보수정 치만 등장시키는 대선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달이 갈수록 더 심해지다가 4월 들어서는 월드컵 이야기 빼고는 나도는 이야기가 없는

사회처럼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외침은 국운이 걸린 월드컵을 망치게 하는 반국가 행위로까지 매도될지 모른다. 아니 정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정권과 제도언론이 앞장서서 말이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아시안 게임이 이어지고 대선 바람이 뒤덮을 게다. 올 한 해 내내 민중들의 투쟁 목소리를 묻어 버리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거 마당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또한 쉽지 않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역할이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져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해라고 말했는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게야말로 올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분수령이 될 해다.

올해 말의 대선으로 30년 넘게 이 땅의 정치를 주름잡아 왔던 3김정치는 막을 내리게 된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 3김정치의 내용적 형태인 금권 정치, 지역주의 정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겠지만 말이다.

이 정치세력 재편기에서 민주노동당이 발돋움하는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보수정치집단의 공고화로만 상황이 정리되고 만다.

불행하게도 만약 보수정치권 강화로만 정리된다면 진보정치세력은 향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 못 하는 정치세력으로 장기간 고난과 수모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올 대선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정말 막중하다.

4. 진보대 보수의 대결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민주당은 올 대선을 개혁 대 반개혁, 한나라당(이회창) 대 반한나라당(반이회창) 전선으로 끌고갈 심산이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 보수세력의 집요한 방해공작 때문에 성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에게 다시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한나라당 전선 주장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개혁 대 반개혁 구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들은 ‘개혁’이란 용어 자체에 빨려들어가 있다. 무엇이 참다운 개혁인지, 누가 진정한 개혁 인물인지 판단하지 않거나 못 하면서 정치인 당사자나 언론이 내세우는 개혁파에 지지표를 던진다.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거부해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민주당이 형성하려는 ‘개혁 대 반개혁’의 그 개혁에 바

로 반개혁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진보의 본질이 개혁 용어 속에 묻혀 버려 진보세력의 목소리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변수로만 작용한다.

때문에 올 대선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보 대 보수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5. 무엇이 진보의 기준인가?

이 시대 진보의 기준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느냐 아니면 수용하느냐다.

신자유주의를 거부,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에 설 때만이 진보세력, 진보인사가 되는 것이다.

신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개혁과 진보를 표방한다면 사이비 개혁, 사이비 진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찬양론자들이 뻔뻔하게도 진보 인사 행세를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파’ 들도 많이 있어 국민들이 현상의 본질을 잘 못 보고 혼동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진보 대 보수의 대립 구도 구축은 바로 반신자유주의 대 신자유주의 전선 구축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운동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만들 수 있고 진보정치의 토대가 구축된다.

6. 신비판적 지지론에 대해

민주당 내 대선 경선 후보인 노무현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신비판적 지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잘못된 게 많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음에 췌 들지 않더라도 이회창 대통령 탄생만은 막아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선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은가.’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개혁파’인 노무현 씨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신비지론이다.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론이 신비지론이다.

신비지론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노무현 씨를 범진보진영의 후보로까지 내세우면서 진보진영의 지지를 한 곳으로 모으자고 말한다.

그들은 이 주장을 비판하면 “이회창과 노무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며 욕박지른다. 이회창과 노무현은 분명 차이가 있다. 있어도 많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무현과 민주노동당 후보의 차이

다. 이 차이는 이회창과 노무현의 차이를 훨씬 뛰어넘는 차이이다. 민중 생존에 관한 차이이다.

1997년 대선 때 “우리 나라 정치 발전과 진정한 사회 개혁을 위해선 진보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위해 한번만 더 미루자. 하지만 다음 대선에선 모두가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던 사람들이 1987, 1992, 1997년을 거치면서 발전돼 온 민주당 지지론인 신비지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또 다시 “이번 한번만 더. 진보정당은 다음 번에…” 하고 말할 것이다.

최악과 차악의 순환 속에서 진보정당의 토대 구축은 언제 이뤄지겠는가. 민주노동당의 2002 대선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7. 민주노동당은 2016년에 집권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정당이다. 이 땅에서 진보정당의 집권은 요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요원하다고만 생각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국가 권력 쟁취는 지난한 과업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레 움츠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요즘 민주노동당의 집권 15개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 2004년 국회 진입, 2008년 원내 교섭 단체 구성, 2012년 제1야당, 2016년 집권을 향한 계획이다.

물론 이는 단순한 일정표에 지나지 않고 너무나 기능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이러한 각오를 갖고 당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대만의 민진당은 창당 14년만에 집권했다.

우리과 같은 민주화 운동, 민주노조 운동이 거의 전무한 조건에서도 집권을 이뤄냈다.

영국노동당은 1900년에 결성돼 1923년에 집권당이 됐다. 그때의 23년은 오늘날의 10년의 흐름과 같다.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서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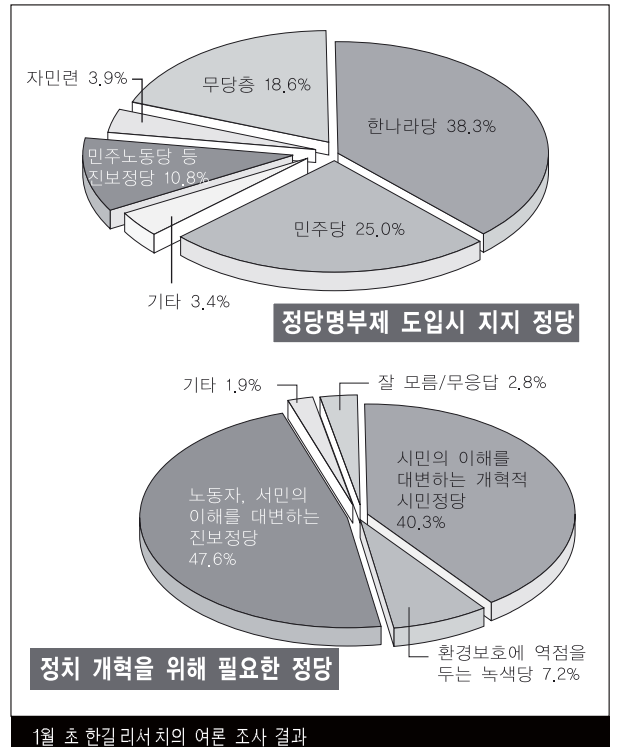
2016년 집권을 위해서는 씨앗을 잘 뿌려야 한다.

2002대선이 그 씨앗을 뿌리는 출발이다. 민주노동당에겐 올 대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8. 청년학생이 앞장서야 한다

대학생들은 선거에 무관심하다고 한다. 이 무관심한 대학생들을 선거에 참여토록 하는 게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씨앗 뿌리기는 청년 학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부대가 대선 운동의 중심축



을 이룬다면 민주노동당의 대선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청년 학생의 입장에서선 선거운동을 통해 민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20대가 선거에 등을 돌리는 한 정치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올 대선은 청년이 좌우한다.

9. 무엇을 외칠 것인가?

민주노동당의 대선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다.

그러나 내용이 없으면 대중은 우리의 투쟁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구체적이면서 피부에 와닿는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 그 알맹이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내걸자.

부자들에게서 세금 많이 거둬 그 재원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택문제 해결하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세금의 봉이 돼 있는 지금의 조세제도를 바꿔내자. 노동자는 세금의 봉이 아니라고 외치자.

“부유세 만들어 공교육 강화하자”, “부정축재 환수하여 나라살림키우자”고 외치자.

수많은 대학생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외치면 바람이 일어난다. 먼저 잠들어 있는 대학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다. 청년 학생이 나서자. 외치자.

2002년 대선은 민주노동당은 물론 우리 진보진영 전체의 앞날을 가름하는 고비다.

민주노동당은 총력을 쏟아 한판의 멋진 승부를 펼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모두가 이 대열에 동참하자.

철도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정원

철도 사유화법안이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철도 노동자들의 몇 차례 대규모 집회와 파업 선언은 정부를 잔뜩 긴장시켰다. 노동자들은 2년 전 전력 사유화 반대 싸움처럼 끝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계속 철도 사유화를 밀어붙일 기회만 노리면서 2월 임시국회 때 사유화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예고되는 인력감축

지난 12월 국회에 상정됐던 철도 사유화법안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몇 조항들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이었다. “정부 조직 내 직제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고용 관련 조항이 한 문장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는 고용 관련 조항이 ‘포괄적 고용 승계’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도 사유화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심각해진다. 철도 인력 중 유지보수 부문 노동자들(약 7천3백 명)은 초기에는 철도시설공단(2002년 발족)에 고용될 지라도 나중에는 철도운영주식회사(2003년 발족)나 민간위탁회사에 용역화될 가능성이 높다. 철도청이 작성한 유지보수 부문의 중간 용역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 신분으로 고용승계가 확정된 인원은 1백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운영 부문(운전·승무·검수 직종 1만 7천4백 명)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철도운영주식회사는 2003년



발족 예정이지만 노선별 민간위탁은 올해부터 추진된다. 철도청은 이미 경춘선과 분당선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철도 사유화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사유화는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철도가 사유화된 다수 국가들은 대부분 사유화 준비 기간과 사유화 뒤에 인원을 대폭 감축했다. 뉴질랜드는 2만 명을 5천 명으로, 일본은 27만 명을 20만 명으로 감축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5년 만에 11만 7천 명을 1만 7천 명으로 줄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6년 이래 7천여 명의 인원이 줄었다.

초점

지난 1월 3일 경총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1.2 퍼센트가 이렇게 예측했는데, 특히 공기업이 가장 불안할 것(32.9퍼센트)으로 예측됐다.

지난 1월 11일 대전 철도청 앞에서 열린 ‘운수직 조합원 결의대회’에 전국에서 2천여 명이 모였다. 철도청은 올 3월에 15개 이상의 역 매표소를 민간 위탁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철도청은 이것이 옛 노조 집행부와 합의를 본 사항이라며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 두 차례 진행된 단체 교섭은 별 진전이 없었고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철도 노조는 1월 27일 ‘특별단체 교섭 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어 사측을 압박하려고 한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사유화 반대, 노동시간 단축, 인력 충원이다. 이 요구들은 정부의 사유화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단체 교섭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김대중

의 철도 사유화에 반대해야 한다. 2월 말의 임시 국회까지 행동을 자제해선 안 된다.

한나라당도 믿을 건 못 된다. 전력사유화법안을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슬쩍 통과시킨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이번 2월 임시 국회 때 철도와 가스 사유화가 본격 논의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올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주5일 근무제’도 다뤄질 것이다.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살인적인 노동 시간으로 고통받는 철도 노동자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철도를 비롯한 공기업 사유화 반대 투쟁과 임금·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투쟁이 결합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양대 선거와 월드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다. 집권 말기의 김대중은 잇따른 부패 사건들로 회생 불가능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일시적으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해 행동하기를 자제하지만 않는다면, 철도 노동자들이 물러서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사유화의 폐해에 맞선 영국 철도 파업

지난 1월 3·4일과 7·8일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의 철도회사인 사우스웨스트트레인(SWT)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또,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영국 철도가 사유화된 뒤 삭감된 임금을 인상할 것과 핵심 노조 활동가들을 공격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

SWT의 그렉 터커는 사회주의자 동맹의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다가 돌아온 직후 기관사에서 차표 검사관으로 강등됐다. 위털루 역의 한 파업 참가자는 “경영자들은 우리의 대표를 쫓아낼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자기의 목을 내놓고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

다”며 노조 활동가 탄압에 맞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SWT은 1월 24·25일 파업 뒤에도 만족스러운 양보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리바트레인스노던의 노동자들도 1월 24·25일과 2월 5·6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 파업은 점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월 중순의 <데일리 메일>은 SWT의 파업이 “새쳐 시절 이전의 전투성으로 복귀”를 뜻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1996년 철도 사유화 이후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려야 했고, 인력은 사유화 전보다 2만 명이 나 감축됐다. 그 동안 경영진의 주

머리는 두둑해졌고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철도 사유화로 붕괴된 서비스와 잦은 열차 연착·취소, 과밀, 높은 요금에 격분하고 있다.

이번 철도 파업은 무시하지 못할 타격을 주었다. SWT는 정기 통근자들이 이용하던 노선으로, 이번 파업으로 20여만 명의 통근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열차운행의 90퍼센트가 중단됐고 하루에 150만 파운드의 손실이 생겼다.

지금 영국의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 사유화 정책의 파탄을 비집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 건강보험(NHS) 붕괴와 늘어가는 실업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블레어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즉각, 모두에게

김어진

“금요일에 동료들과 마음 편하게 술 한잔 한 뒤 토요일 늦잠을 잔다. 일요일 일찍 일어나 부인과 영화관으로 간다. 가격 할인에다 번잡스럽지도 않은 조조 영화를 보기 위해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인과 대형 마켓에 가서 한 주 동안 사용할 물건들을 산다. 아이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서울 근교로 차를 몰고 나간다. 찌든 일상을 말끔히 없애기 위한 ‘자연학습’을 위해서다. …일요일 오후 아이들과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바둑을 두며 머리를 식힌다.”

이것은 한 일간지에 소개된, 주5일 근무를 하는 어떤 노동자들의 주말 일상이다. 이런 주말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람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이 바람을 집권 4년 내내 무시해 왔다.

김대중은 기업주들의 요구는 재빠르게 수용해 왔다. 작년 12월 19일 중소기업 사장들 1천여 명이 모여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긴급 결의대회”를 열자 그 즉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디 이뿐인가. 일련의 게이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김대중의 측근들은 벤처 사기꾼들이 뻔친 청탁의 노예였다. 김대중 정권의 ‘사정’ 업무 총지휘관이었던 신광옥은 주가 조작과 불법 대출을 일삼은 벤처 사기꾼들의 요구를 넘썃넘썃 들어 줬다. 김대중의 가장 유력한 충고자였던 박준영도 회대의 살인마·사기꾼 윤세석의

부탁에 발뺌고 나섰다. 김원길과 이종찬도 벤처 기업주들의 청탁에 연루됐다.

또한, 게이트에 연루된 공안 기구의 수뇌들이 한 손으로는 구조조정 정책과 노동 탄압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주가 조작, 불법 대출 허가, 주식 투기 등을 일삼았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의 오랜 바람인 주5일 근무제 요구는 노사정 위라는 블랙홀에 처박혔다.

어물쟁, 더누다기로

김대중이 주5일 근무제 요구를 어떻게 무시해 왔는지 살펴보자.

1997년 1월의 대중파업 전부터 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1996년 여름, 자신감에 차 있던 자동차 노동자들은 주40시간 노동제 도입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싸웠다. 기아·아시아자동차, 테acom 등 7개 노조가 주 41시간으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라중공업, 쌍용차 등 73개 노조가 주 4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압력을 받아 상당수 기업들도 격주 휴무제를 도입했다. 1997년 말 경제 공황이 터지자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노동자 투쟁의 압력을 받은 김대중은 대선 공약으로 주5일 근무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김대중은 노사정위에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떠넘겼다. 민주노총은 어물쟁 넘어가려는 김대중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주5일 근무제 요구와 민주노총의 파업 분위기에 밀려 김대중은 서둘러 연내 입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다시 노사정위에 떠넘겨진 노동시간 단축 입법화 문제에는 먼지만 수북이 쌓여 갔다.

‘노동자들의 투쟁→연내 입법화 약속→노사정위에 떠넘기기’라는 그림은 2001년에도 재방송됐다. 2001년 7월 말 김대중은 기만적 양보 조치의 일환으로 연내 입법화를 공언했다. 그러나 7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또 다시 노사정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노사정위 위원장



이 한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노동 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이니 길게 봐야 한다”며 능청을 떠는 사이에 법안은 더 누더기가 돼 갔다.

더 후퇴된 주5일 근무제 법안 내용은 주5일 근무제를 무색하게 만드는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현 재 정부의 법안은 기존의 공익안보다도 더 후퇴해 그 동안 노동자들이 싸워서 쟁취해 온 권리들을 무(無)로 돌리는 개악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현재의 정부안대로라면 주5일 근무제는 9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해야 한다. 그리 되면 전체 노동자의 86.5퍼센트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최소 5년 안에는 주5일 근무제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전체 노동자의 45퍼센트(5백90만 명)를 이루고 있는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게 된다. 초과 근로시간 할증률은 현행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줄었다. 최종안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야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은 더 줄게 된다.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말할 것도 없다. 임금 삭감 문제도 법안 부칙에 선언적으로 “보전을 명시했을 뿐”이다. 한 마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이다.

11월 중순 노사정 위를 탈퇴하기는 했지만 주5일 근무제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데에 이남순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자들도 한몫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공개면서 기업주들과 우익의 압력에는 계속 밀려 대중의 개혁 요구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어진 게 집권 4년 동안 김대중 정부가 한 일이다. 그런데도 김대중은 민주노총이 정부 법안에 반대하자 “노사정위 합의를 더욱 유도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뒤틀려지고 누더기가 된 정부측 주5일 근무제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고통의 치료약

이윤 제일주의 경제가 낳는 요동치는 위기는 대중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한 쪽에서는 너무도 오랜 노동시간 때문에 지쳐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일자리를 못 구해 신음하는 실업자들이 늘어 간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노동자의 연간 총 노동시간은 지난해 2천4백74시간이었다. 이것은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 등 유럽 나라들이나 호주·뉴질랜드 등에 비해 약 1천 시간이 많다. 미국과 일본보다는 6백 시간에서 7백 시간이나 더 길다. 철도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 노동자들도 명절 때 제대로

한번 쉬지도 못한다. 그러는 동안 ‘시민의 발’은 위험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들은 취업의 높은 담을 쳐다 보며 한숨 짓는다. 김대중은 얼마 전 연두기자 회견에서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했다.

이런 모순과 불합리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년 내내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업은 20퍼센트의 인력을 더 뽑아야 한다. 주5일 근무는 6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기업주들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재원이 없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도 갈수록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됐던 많은 경우는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였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938년에 주40시간제를 도입했다. 프랑스가 주40시간 노동제를 쟁취했던 때는 1936년이었고, 경제 위기에서 확실히 벗어나지 못했던 1998년에는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설득으로 기업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는 없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논리는 현실의 검증을 이겨 내지 못함을 노사정 위는 잘 보여 준다. 한국노총이 하나를 양보하면 경총이 두 개를 더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정부 관료들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경총의 손을 들어 주는 모습이 바로 4년 동안 노사정위 내에서 주5일 근무제 논의가 흘러 온 과정 아니었던가.

한나라당을 활용해 김대중에게 압력을 넣자는 의견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작년 말 “입법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어떤 작자들인가? 한나라당은 주5일 근무와 주5일 수업제에 반대해 왔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5일 수업 시행 방안은 교사를 노동자로 보는 데서 나온 발상”(권철현 대변인)이라며 “부작용”을 운운해 왔다.

작년 12월 중소기업 사장들이 보여 준, 자기 계급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기민하고 철두철미한’ 움직임에서 교훈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만이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지금 민주노총은 ‘2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적절하게도 노동법 개악과 약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가 파업의 목표다. 정부 법안을 폐기하고 진정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해야 한다. 

2002년 세계경제 전망: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정성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1. 세계경제위기를 보는 시각

작년은 미국의 신경제의 붕괴에서 시작하여 9·11 대테러 후 세계경제의 급랭과 미국 엔론사의 파산,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진 세계경제 위기의 한 해였다. 그런데 작년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오늘 세계경제의 향방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고전적 맑스주의 공황론에 의거하여 올해도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것이다.

고전적 맑스주의 공황론은 맑스의 이윤율의 저하 경향 법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맑스의 이윤율의 저하 경향 법칙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이윤을 창조하는 원천인 살아 있는 노동자에 비해 ‘죽은 노동’ (기계, 원자재)의 비중이 증대하고 (이를 가리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한다), 그 결과 이윤율 (이는 이윤량을 투자자본으로 나눈 값이다)이 저하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맑스는 자본주의 경제에 특유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투자를 감소시켜 공황이 초래된다고 보았다.

이윤율의 저하 경향 법칙은, 맑스가 강조했듯이,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가 지배했던 우리나라에서 맑스의 이 법칙은 오래 동안 좌파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그러나 스탈린주의가 붕괴한 지 10여 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세계경제 위기가 새천년의 현안으로 되고 있는 오늘, 맑스의 이윤율 저하 법칙의 타당성이 재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신식민주 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을 주장했던 이들조차 오늘은 맑스의 이윤율의 저하 법칙의 현재적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본주의 비판》, 공감, 2001을 보라.) 사실 세계경제 위기를 독점자본의 과잉생산 경향으로 설명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공황론은 오늘 세계경제위기 설명에 무력하다. 오늘 세계경제 위기의 본질은 독점자본의 과잉 초과이윤이 아니라, 이윤의 부족, 즉 이윤율 저하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또 독점의 문제설정으로서는 오늘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원천인 세계적 경쟁과 축적의 동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또 오늘 세계경제 위기를 과잉생산 공황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제위기는 물론 과잉생산 공황이지만, 과잉생산은 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공황의 현상 형태, 즉 이윤율 저하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과잉생산 공황은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지, 과잉생산 혹은 과소소비가 공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맑스의 이윤율의 저하 경향 법칙이 강조하는 ‘수익성의 문제’가 자본주의에서 결정적이라는 사실은,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자본가들 자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공공성’ 등 예전에 상투적으로 늘어놓던 미사여구를 내던지고 ‘가치 경영’, ‘수익 경영’의 가치를 노골적으로 내거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맑스의 이윤율의 저하 법칙의 관점에 설 경우 2000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위기는 1965~1973년 이후 시작된 세계 자본주의의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 2002년 들어 세계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 호황을 재개할 것이라는 일부 예측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각국 경제의 전망을 종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미국 경제의 전망을 중심으로 향후 세계경제전망의 대강의 윤곽을 그려 볼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 경제 중심의 세계경제 전망이 방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까닭은 오늘날 세계경제가 미국이라는 패권적 제국주의 초강대국을 정점으로 하여 구성된 위계적 피라미드 구조이며(이 점에서 오늘날 세계경제에 중심이 없다는 네그리(A.Negri) 등의 《제국》(이학사, 2001)에서의 주장은 옳지 않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역동적 중심이 일본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즉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세계경제의 아메리카화와 대미의존성을 크게 증대시켰고 그 결과 세계경제가 결정적으로 미국 경제의 동향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02년 세계경제 전망의 문제는 2001년 들어 시작된 미국 경제의 불황이 2002년에도 계속될 지 여부의 문제, 즉 미국 경제의 불황이 심화되면서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 일본 경제의 파산, 중국 경제의 성장 중단 등의 시나리오와 결합되어 1930년대와 같은 세계 대공황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 아니면 반대로 일부 경제 예측 기관의 주장처럼 2002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불황의 바닥을 치고 IT 산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과 같은 신경제 호황을 재개하면서 세계경제 전체의 호황을 주도할 가능성 등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2.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배경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늘 세계경제 위기는 1965~73년 이후 시작된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1965~1973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이윤율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장기호황시기(‘황금시대’라고도 한다)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5~1973년 시기까지 지속되었던 세계경제의 장기호황이 종식되었다. 1965~1973년 이후 이윤

주가 폭락에 망연자실해 하는 투자자들

율 저하는 네그리 등이 주장하듯이 노동자계급 투쟁이 초래한 임금상승=이윤압박(착취율 저하) 때문이 아니라 맑스가 말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야기한 결과이다.

그런데 1965~1973년 이후 시작되었던 주요 선진국의 이윤율의 저하는 1980년대 접어들면서 일단 중단되었다. 미국에서는 정확히 1982년 이후 이윤율이 저하를 멈추고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는 주지하듯이 1980년대의 대서양 양안에서 레이건과 대처가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반혁명의 효과였다. 즉 198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의 지배 계급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격을 통해 경제위기로부터 탈출을 시도했다. 그 결과 1970~1995년 동안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시간당 실질임금이 절대적으로 저하하고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연장되는 등 착취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같은 노동자 착취 강화에 힘입어 미국의 이윤율은 1982년 이후 부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이윤율 회복은, 브레너(R.

Brenner)가 《혼돈의 기원》(이후, 2001)에서 지적하듯이, 미국과 독일, 일본 사이의 불균등 발전,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의 절상이 초래한 일본과 독일 제품의 가격 경쟁 약화 및 달러화 저평가에 따른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의 회복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1990년대 미국 경제의 회복은 일본과 유럽 경제의 침체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들어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일부 논자들은 세계경제가 1965~73년 이후의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기호황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인터넷 혁명론, 신경제론 등의 유행에 편승하여 기세를 얻는 듯 했지만, 2000년 이후 신경제 호황이 붕괴하면서 힘을 잃었다. 신경제론자들은 1990년대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 없는 고성장, 즉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의 동시달성을 근거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배반관계를 끝자로 하는 부르주아 거시경제학의 기본 명제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이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조금도 신기한 현상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의 물가안정은 상당 부분 1997~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및 199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이들 나라에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루어진 대미 수출품의 가격 하락 덕분이었다. 그리고 4퍼센트의 낮은 실업률 운운하지만 클린턴 집권 시기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종이었다. 또 1990년대 후반 미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불황과 실업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제3세계에 불황과 실업의 고통을 전가함으로써만 자국의 호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세계경제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갈수록 제로섬(zero-sum) 게임의 양상을 띠어 가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후 1965~1973년에 이르는 장기호황 시기처럼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나라들이 동시에 호황을 구가했던 ‘양함’(positive-sum) 게임은 이제는 되돌아 갈 수 없는 먼 옛날의 추억으로 되어 버렸다.

3. 2000년 이후 미국의 신경제 호황의 붕괴

1982년 이후 시작되었던 미국의 이윤율 상승은 1997~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잇따른 러시아 및 브라질의 경제위기 이후 중단되었다. 그래서 1997년은 1982년 이후 상승했던 미국의 이윤율이 정점에 도달한

해로 기록된다. 1997년부터 미국의 이윤율은 다시 저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이윤율이 다시 저하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관련 주들의 주가는 폭등했다. 또 1997~199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의 유희화폐자본의 미국 유입이 가속되었다. 1997~2000년 미국의 신경제 호황은 이를 기초로 한 것이다. 1997년 이후 신경제 호황은 무엇보다 이윤율이 저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1965~1973년 시기의 장기호황과 구별된다. 1997년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은 높은 주가가 부추긴 ‘자산효과’(wealth effect) 그리고 민간부채의 증가에 기초한 소비지출 증대 및 전세계 유희화폐자본의 미국으로의 집중에 기초한 성장이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거품 성장이었다. 따라서 실물경제의 이윤율 상승이 부재한 가운데 팽창한 거품의 붕괴와 그에 따른 성장의 중단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1982년 이후 상승의 정점이었던 1997년 미국의 이윤율 수준은 여전히 전후 장기호황 시기였던 1960년대 중반의 이윤율의 70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즉 미국의 이윤율은 1970년대 저하 이후 1980년대 들어 1997년에 이르기까지 약 15년 동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황금시대’의 이윤율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 경제 및 세계경제가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구조적 위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 위기에 맞서 미국의 금융자본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새로운 장기호황의 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를 수립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

1997~2000년 미국의 신경제 호황이 거품이 주도한 경제성장이었기 때문에 거품의 붕괴는 곧바로 성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미국 경제는 2001년부터 공식적으로는 두 사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정의되는 불황(recession) 국면으로 돌입했다. 거품 붕괴의 결과 ‘역의 자산효과’(reverse wealth effect)가 초래한 소비지출 감소는 그나마 소비 수요에 의해 유지되던 성장을 중단시켰다. 9·11 대미 테러 이후 소비심리의 급랭은 이를 격화시켰다. 2001년 미국 경제는 결국 연초 많은 부르주아 경제예측기관의 ‘연착륙’ 희망을 깨고 ‘경착륙’하고 말았다.

2001년 미국 경제의 ‘경착륙’과 함께 1998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1998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제회복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이었다. 미국의 거품 호황에 기초한 미국의 소비 수요 증대 및 이에 수반한 미국의 수입 수요 증가가 1998년 세계경제 위기의 일시적 수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거품 붕괴는 미국의 소비 수요 감소 및 수입 수요의 감소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미 수출 감소를 초래하여 이들 나라의 경제침체를 겹쳐시켰다.

4. 2002년 세계경제 전망

2001년 들어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감지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9·11 대미 테러 이후 소비심리가 급랭하면서 주가 폭락과 경기 침체가 격화되자 작년 한 해 동안 11차례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지금 미국 연방기금 금리는 1.75%로 40년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9·11 대미 테러 이후 급증한 군비지출은 경제의 총수요 수준을 증대시켰다. 또 미국의 자본은 9·11 대미 테러 이후 조성된 '공안정국'을 무차별적 해고 감행 등 노동자 공격에 활용했다.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예상외로 단기에 승리한 후 9·11 대미 테러 이후 위축된 소비지출도 다시 증대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 2000년 이후 계속된 IT산업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인식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2001년말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는 2002년 들어서도 미약하나마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 주식시장의 최근의 반등을 보고 2000~2001년의 주가 하락은 이제 끝났으며, 새로운 대세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호황이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은 실물경제의 이윤율 상승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2001년 중 11차례의 연방기금 금리 인하에 따른 통화량의 급증(통화량의 한 지표인 M2는 2001년 중 10.5%나 증가하여 지난 30년 이래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 거품일 뿐이다. 2001년 부시 정부의 팽창적 통화정책 및 군사적 케인즈주의는 실물경제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1997년 이후 팽창했던 금융 거품이 터지지 않고 유지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호황의 재개는 팽창적 통화정책이나 군사적 케인즈주의가 부추기는 소비 지출과 정부 지출의 증대가 아니라,

누적된 과잉자본의 가치 파괴를 통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저하 및 노동자 착취 강화에 기초한 이윤율의 상승이 가능하게 하는 투자의 증대를 필요로 하는데, 오늘 미국 경제에서 이와 같은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거품이 충분히 꺼졌다는 일부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1965~73년 이후 시작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 추세 및 1997년 이후 시작된 이윤율의 순환적 저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 최근호(2002년 1월 12일치)에 따르면 2001년 미국의 이윤율은 193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저하했음에도 불구하고 S & P 500의 주가수익비율(p/e ratio)은 무려 40으로 그 장기평균치 16의 두 배도 넘었다. 주가수익비율이 이렇게 높은 까닭은 이윤율은 저하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와 같은 팽창적 통화정책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저하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미국 경제에는 아직도 꺼져야 할 거품이 엄청나게 남아 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국의 가계 부채 및 기업 부채와 아직도 충분히 그 가치가 파괴되지 않은 IT산업의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은 불황 탈출과 호황의 재개에 필수적인 기업 투자와 소비 지출의 증대를 곤란하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2001년과 비슷한, 혹은 더 심한 경제침체를 야기할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부르주아 논자들이 희망하듯이 유로화 출범이 EU 경제를 부흥시키거나 또는 중국의 고도성장이 미국 경제의 침체를 상쇄하여 세계경제 위기의 진행을 상쇄시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유럽 경제의 부흥 또는 중국의 고도성장의 지속은 이들 나라 제조업의 수출 증대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데, 미국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유럽 및 중국 제조업의 수출이 증대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엔론 사의 파산, 미국 달러화 가치의 폭락과 자본 유출,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 일본 경제의 부도, 중국의 성장 중단과 같은 변수들이 터져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불황이 격화되어 세계대공황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요컨대 2002년에도 미국의 거품 붕괴와 불황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 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1965~73년 이후 이윤율의 장기적 하강과 함께 시작되어 새천년 들어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는 1980년대 이후 미제국주의가 주도해 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한 공황 타개 전략의 전세계적 파산을 입증하고 있다.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은 역겨운 자들인가?

브리짓 바르도의 '비난'에 대한 이정구 씨의 비판은 옳았다. 개고기 식용과 인종 차별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인종 차별적 관점만이 개고기 식용을 비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바르도를 '역겹다'고 여긴 이정구 씨는 정당하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브리짓 바르도와 동물 권리 옹호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에 이른다. 단지 약간의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고기 논란의 이면에는 개를 포함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동물 권리론자들의 주장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동물의 권리란 더 이상 어색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동물도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어떤 사람에게든 동물 권리와 동물 복지가 대체로 비슷한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나아가 동물이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람처럼 존중받을 권리 혹은 생명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동물을 인간 생활을 위한 일종의 소모품이 아닌, 생명의 한 축으로서 대접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동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곧 인간 복지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동물 권리 옹호론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동물 권리와 인간 복지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은 '식량' 문제를 내세운다.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햄버거 용 소를 목축하기 위해 아마존의 밀림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무장한 살인자를 투입하여 그 곳에서 살던 원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야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은행은 돈을 투자하고, CIA는 투자가를 보호한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환경운동의 가장 저명하고, 가장 중요한

인사들 중의 하나였던 치코 멘데스가 암살당하기도 했다. 이 때 대부분의 동물 옹호론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도살장에서 소가 '살해' 당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생산적인 목축이 소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육식을 위해 동물을 키우는 행위는 그 자체가 굉장히 비생산적이다.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식량의 70퍼센트가 이들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굶주림을 담보로 한 이러한 행위는 순전히 자본의 이윤 동기에 있다. 사실, 자본주의 이전 어느 시대에서도 육식은 보편적인 음식 문화가 아니었다.

또, 육류는 단백질 함유 비율이 허용치의 두세 배에 달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할 때 간이나 신장 등에 무리를 주어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1군~4군 음식 분류는 미국 낙농단체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표에 불과하다. 즉, 현대 사회의 육식 문화는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5천 명의 내과 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신뢰성 있는 의사모임(PCRM)'은 이를 가리켜 '단백질 신화'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동물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권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은 '동물의 권리가 없는 곳에 인간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동물에 대한 과학실험은 정당인가?

지금 유럽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 반대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2000년부터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실험 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줄이며, 세포 실험 시뮬레이션 인공 피부

등의 대체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화장품 실험을 위해 살해된 토끼는 지구를 덮을 만큼 많았다.

'동물 실험의 천국'인 남한에서 이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한 해 4백만 마리 가량의 쥐, 토끼, 개, 원숭이가 동물 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바이오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실험 동물의 사용량은 해마다 30~40퍼센트씩 크게 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전자를 조작한 '당뇨병 쥐', '암에 걸린 쥐', '미치광이 쥐' 등 질병 모델 실험 동물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생물 재해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이러한 동물 실험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정구 씨는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침팬지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게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적어도 에이즈에 관한 한 진실은 다른 데 있다.

침팬지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실험은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침팬지에 투여해도 침팬지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HIV의 사촌이라고 불리는 SIV(원숭이 면역결핍바이러스)는 실제로 원숭이에게 면역결핍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에이즈의 모순을 드러낸다. 즉, HIV는 바이러스가 아니며, 설령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인 것이다. 1993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바 있는 케리 물리스, 리트로바이러스에 관한 한 세계 1인자로 손꼽히는 페터 듀스버그 박사 등은 에이즈가 과학적 사기이며, 제약 회사의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끔찍한 범죄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를 반체제 에이즈 운동이라고 부

르고 있다. 남한에도 ‘한국 에이즈 재평가
를 위한 인권모임(<http://www.ncaids.co.kr>)’이
있다.

사실, 동물 실험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
보다 그 과학적 실험의 정당성을 먼저 제
고해야 한다. 에이즈의 경우 과학자들은
HIV로 침팬지를 죽일 수 없자, SHIV라는
실험실에서 개발된 독극물로 침팬지를 살
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침팬지가
에이즈로 죽었다고 떠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과학이 상품 생산 과
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는
AZT 등 항에이즈 치료제를 소위 에이즈
환자에 고가에 팔 수 있다. 한 달에 1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 약들은 현재 미국과
남아공 등에서 소수층이다. 그 치료제를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2~3년 내에 목숨
을 잃었기 때문이다.

과학은 이데올로기이다. 이윤을 창조하
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과학이
존재할 수 있는 법칙인 것이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 환원주의, DNA 결정주의적 법
칙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질병으로
부터 해방시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
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암과의 전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암을 일으킨다는
리트로바이러스를 찾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암 환자는 계속 늘
어만 가고 있다. 그 와중에 애꿎은 동물들
만 살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것보다는
과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상품 생산 과
정을 비판하는 편이 훨씬 빠르다.

동물권리 옹호론자에 대한 부작렬한 비판

1975년 세계적인 동물 권리 운동을 야
기했던 《동물해방》의 저자 피터 싱어는
‘동물에 대한 착취’가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곧 반
대에 부딪혔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그의 강연은 금지되었

다. 항의자들은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그
의 신념이 나찌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말
했다. 하지만 나찌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
았다.

이와 같이 동물 권리 옹호론자 사이에
는 좌파와 우파가 혼재되어 있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남한 동물 권리 옹호론
자 중에 중산층 중년 여성들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이 모두 채식주의자
인 것 또한 아니다. 단지, 선택적 동물 권
리 옹호론자일 뿐이며, 그런 측면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정구 씨의 비판은 설득력
이 있다.

하지만 동물 권리 옹호론은 하나의 체
계적 이론을 갖춘 것이 아니다. ‘동물해방
전선’과 같은 부정부적인 행동주의자에
서, 동물 보호 차원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물학대방지연합’
과 같은 우파까지 그 색깔은 매우 다양하
다. 하지만 ‘동물보호, 채식주의, 환경운
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물 권리 옹호론
자들은 단결하기도 하고 서로 투쟁하기도
한다. 가령, 브리짓 바르도는 나찌의 ‘유대
인 대학살’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만, 피터 싱어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물 권리 옹호론자의 좌우를 한 묶음
으로 취급한 이정구 씨의 비판은 그래서
무의미하다. 그는 “특정 동물의 권리를
말하는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위선에 가깝다”에서 멈추어야 했다. “동
물 권리 운동의 역사가 매우 역겹다”고
말하는 것은 스탈린주의자와 마르크스주
의자를 한 묶음으로 취급하여 ‘사회주의
자는 역겹다’고 비판하는 것과 같은 꼴이
다.

그리고 1930년대 나찌 독일에서 동물
실험을 금지했던 것을 동물 권리 옹호론
과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
이다. 자본주의 초기의 동물 권리 옹호 운
동은 주로 부르주아 계급에서 그리고 정
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824년 영국
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동물복지협회

인 ‘동물학대방지협회’는 빅토리아 여왕
의 명령으로 만들어졌고, 1850년에 통과
된 프랑스의 동물학대금지법인 그라몽 법
은 보수 반동인 자크 델마 드 그라몽 장군
의 동물보호협회가 힘쓴 결과였다. 하지
만 1871년 파리 코뮌은 노동자의 피로 물
들었다. 이처럼 지배 계급의 동물 보호론
은 좌파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의 생각과
는 아주 다르다.

마지막으로, 이정구 씨는 동물에 대해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아주 싫
어하는데, 동물 권리란 윤리적 권리를 의
미한다. 즉, 동물들도 존중되어야 할 권익
을 지니고 있다. 비록 동물들의 권익이 침
해되는 것이 동물에게 주는 고통보다는
사람에게 훨씬 많은 즐거움을 준다고 해
도 말이다. 이정구 씨 역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동물을 가혹하게 학대
하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개
고기 식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개고
기가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 모두
속설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
장하는 것이다. 나는 동물 권리 옹호론자
이다. 그러나 양의 목을 베어 제단에 바치
는 유대인의 도살 방식을 비난하지 않는
다. 가능한 한 생명을 보호하기를 부탁할
수는 있으며, 앞으로는 그러한 도살이 사
라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동물 권리가 자본
주의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
각한다. 동물에 대한 학대와 잔혹한 실험,
무차별적인 도살 등은 모두 자본주의의
운동 방식, 즉 모순에서 비롯하기 때문이
다. 그 모순은 노동의 소외이며, 따라서 사
회주의의 자라면 동물 권리 옹호론자를 ‘역
겹다, 위선적이다’고 무조건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좌측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정구 씨의 주장이 대
단히 아쉽게 느껴진 것은 바로 여기에 있
다.

바라

“크리스마스의 해방”을 읽고

지난 호에 실린 김명진 씨의 에세이 “크리스마스의 해방”은 미국의 급진 성서학자 리처드 호슬리의 동명의 책에 대한 서평 형식으로 씌어졌다. 1세기 초 팔레스틴과 로마 제국의 사회·정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김명진은 주류 그리스도교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활동가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 하는 듯하다. 이것은 참신한 시도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나는 다만 그의 서술에 내포된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김명진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 탄생 설화를 단순한 신화라고 기각해 서는 안 된다. 초창기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팍스 로마나”(로마의 평화)가 기쁜 소식이라는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 루가(누가)는 예수 탄생이 야말로 기쁜 소식(즉, “복음”)이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배자이자 로마의 하위 계층자 헤로데(헤롯) 왕에 대해 마태오(마태)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 예수를 대치시킨다. 그리하여 예수 탄생 담론은 지배 담론에 대항하는 저항 담론 구실을 한다. 이 저항 담론은 오늘날의 호화스런 크리스마스 와물론 아무 관계가 없다.

루가

시초 그리스도교인들이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음은 진지한 역사가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점이다. 특히 루가는 빈부 격차에 크게 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다, 당신네 부유한 사람들! 스스로 받을 위로를 받고 있으니.”(루가 6, 24) 비록 루가의 대안이 자선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재산에 대한 그의 비판은 매우 급진적이었다.

그러나 루가가 반로마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루가가 친로마적이라는 게

루가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다. 가령 루가 복음서에서 유대아 주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빌라도는 대제관[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말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이간한다고 나에게 데려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당신들 앞에서 신문했으나 고발을 뒷받침할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소. 헤로데도 죄목을 찾지 못했기에 우리에게 되돌려보냈소. 그는 사형에 처할 것은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매질이나 해서 풀어 주겠소.” …… 빌라도가 다시 그들을 가까이 불러 예수를 풀어 주겠다고 했으나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쳐 댔다.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빌라도가 세번째로 말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것을 했다는 말이요?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찾지 못했소. 매질이나 해서 풀어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다그쳤고 소리는 갈수록 거세어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요구를 들어 주기로 결정했다.(루가 23, 13-24)

정오가 되어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세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사라지고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옵소서” 하고 부르짖으신 다음 숨지셨다. 그러자 백인대장[로마 군대의 하급 장교]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했다.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23 44-47)

사도행 전에서도 지은이 루가에 따르면, 바울로(바울)를 신문한 로마 총독 페스토는 바울로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그러나나[페스토]는 그[바울로]가 사형당할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바울로]이 황제께 상소했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

25, 25)

왕과 총독과 베르니게와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일어나 물러가며 서로 말했다. “[바울로가] 사형을 받거나 구속당할 만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은 것 같소.”(사도 26, 30-31)

더구나 루가는 자기 저작들인 루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로마의 고위 관리인 듯한 데오펠로(테오빌로)에게 헌정하고 있다(루가 1, 1-4; 사도 1, 1) 데오펠로는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루가의 문필적 기교를 위한 가상 인물일 수도 있다. 설사 가상 인물일지라도 루가가 그러한 로마 권력자를 경청자로 염두에 두고 글을 썼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것이다.

여러 성서학자들(가령 한스 콘첼만과 에른스트 헨헨)도 루가 신학의 대(對)로마 변호론적 성격을 지적했다. 그런 루가가 “팍스 로마나”와 대립되는 예수 탄생 얘기를 전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마태오

마태오가 유대인의 거짓된, 사악한 왕 헤로데와 대립되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부각시켰는가 하는 점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비록 마태오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과 동의어인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곤 하지만, 시종일관 그는 “하느님(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강조한다. 즉, 마태오는 예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아들”은 또한 “하느님[아훼]의 종”임이 강조된다(마태 12, 17-21).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기는 온유함이 바로 “종”의 표상이다. 이런 그리스도 이미지는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탈출과 해방을 지도하는 모세의 이미지와 별

로 흡사하지 않다. 비록 마태오와 루가가 구약성서 출애굽기(이집트 탈출기)의 주인공 모세를 아기 예수의 “모형”으로 삼았을지라도 말이다.

예수

그러므로 루가와 마태오가 예수 탄생 설화를 저항적 색조로 편집했다는 김명진의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

그런데, 흥미있게도, 김명진은 호슬리와 달리 예수가 정치 권력 문제와 직면하지 않았다고 분다며 제한을 부여한다. 예수는 오히려 비정치적인 농민 급진주의와 관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이른바 “역사적(역사의) 예수”, 즉 실제의 또는 원래의 예수

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가 실존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다. 물론 그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기원은 예수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교 창시자(교조)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교의 “전제”였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구원자)라는 믿음이 그리스도교 성립을 위한 하나의 — 물론 중요한 — 조건이었다.

신화

김명진의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방법론과 관계 있다. 그는 예수 탄생 설화를 단순한 “신화로 치부하려는 합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당시의 피억압 민중은 그것을 “해

방의 이야기”로 읽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엥겔스가 비판한 D F 슈트라우스의 신화론을 연상케 한다. “슈트라우스의 신화 이론은 복음서의 내용을 대중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F 엥겔스, 〈브루노 바우어와 초기 기독교〉, 1882.)

“이 학파 [슈트라우스가 속했던 튀빙겐 학파]에 속한 학자들은 성서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나 비현실적 이야기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무시해 버렸다. 하지만 그 밖의 것들 가운데 ‘건설 수 있는 것들은 건져 내려’ 애쓰고 있다. 여기서 이 신학 학파의 한계가 드러난다.” (F 엥겔스,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 1894-95.)

이수연

서평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김영사

에

드워드 사이드의 저서 《오리엔탈리즘》(1978)에서 ‘동양적’이란 말은 서구의 왜곡이 빚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지만, 오리엔탈리즘의 망령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개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대부분의 기성 언론과 지식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아랍인들의 폭력성을 들먹였다.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인종차별적 광기를 내뿜었다.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은 이런 아랍

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비판하는 사이드의 글 모음집이다. 총 18편의 글은 1998년부터 9·11 테러 이후까지 쓴 것인데, 각각의 글은 글쓴 시기와 무관하게 중동의 비극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사이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자들과 서구 언론, 지식인들이 아랍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폭로한다. 단지 이슬람에 대한 소문에만 의지해 글쓰고 방종하는 점, 이슬람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도 많지만 그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만 보도하는 것, 팔레스타인인을 ‘아랍계 이스라엘인’으로 불러 혼동시키는 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공격을 비판하는 UN결의안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 등은 그들이 보인 왜곡, 은폐, 과장의 예들이다.

무엇보다 사이드는 아랍인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지식인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문명의 충돌》을 쓴 새뮤얼 헌팅턴은 무지의 충동을 드러낸 형편없는 사상가임을 보여 준다. 작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V.S. 나이폴은 서구 시각에서 이슬람 문화

를 다룬 지적 파탄자임을,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만은 아랍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기 지식인임을 드러낸다.

이들의 일토당토않은 주장을 들춰내 반박하는 사이드의 글은 아주 통쾌하고도 탁월하다. 그 논평들을 읽다보면, 미국 시온주의자들의 협박과 난치성 백혈병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려는 사이드의 투지가 느껴진다. 사이드는 저명한 문학평론가답게 다양한 문학 작품(또는 작가)을 인용하는데 이 또한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한편, 저자는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지도자 아라파트의 부패와 무능,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비굴함도 신랄하게 비판한다. 5년 전 아라파트의 자금 관리자는 연간 4억 달러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폭로했다. 또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공금을 유용해 미국의 힐러리와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에게 보석을 선물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한때 팔레스타인 망명정부의 국회의원이었던 사이드가 아라파트와 결별했을까!

사이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주된 투쟁

방식인 테러를 옹호하지 않는다. 일부 용감한 사람들의 테러는 시오니즘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며 “대중의 힘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전략과 전술을 이용한 집단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이드의 궁극적인 대안— 동등한 2개의 독립 국가 건설을 원칙으로 한 유엔 평화 협상 — 은 진정한 중동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사이드는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에게 양보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시온주의 정부가 붕괴되지 않고도 두 개의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폭력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 볼 것을 권유한다.

김은영

냉전과 대학



노암 촘스키 외,
당대

한
후 남한 현

대시는 냉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냉전이 계속되는 동안 집권한 정권은 하나같이 북한을 핑계삼아 억압적 정책들로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수식어가 붙은 김대중 정권도 북을 주적으로 명시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 초 냉전은 끝났지만 우리 생활과 관념은 냉전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냉전의 한 축이었던 미국 본토에서 냉전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촘스키, 하워드 진, 임마누엘 월러스틴 등 9명의 미국 내 저명한 진보학자들이 쓴 《냉전과 대학》은 냉전 동안 미국 대학에서 일어난 일들과 사회 전반적 분위기를 상세히 기

록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끝무렵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은 미국을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만들어 주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이제까지 유례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국가가 됐다.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펼쳐졌다.

1950년대 초 미국에서는 날로 커지는 공산주의의 영향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게 된 소련에 대한 히스테리적 반응이 매카시즘으로 나타나게 된다.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 매카시는 고위층의 공산주의자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리스트’는 가짜임이 드러났지만 그 여파는 미국 전역을 마녀사냥의 광기로 몰아갔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왜 공산주의자가 아닌지 해명해야 했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공격은 진위 여부에 관계 없이 큰 위력을 떨쳤다. 미국 정부와 우익들은 소련의 위협을 들먹이며 노동 조합 활동가나 진보적 지식인 등 좌파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인권 유린을 했다.

특히 매카시즘은 대학 내의 자유로운 학문 탐구를 가로막았고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했다. 미국대학협회(AAU)의 30여개 대학 총장들은 공산당원의 “대학 직위에 대한 권리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진보적 교수들은 감시당했고, 해고당하기 일췌였다. 역사, 지리, 언어 등에 대한 연구는 미국 정부의 ‘필요’에 맞게 이뤄졌다. 미국 민중의 역사를 연구한 하워드 진은 FBI의 감시 대상 리스트에 올랐으며, 강의 하던 대학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연구를 계속해야 했다. 월러스틴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맞춰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 있는 지역 중심의 지리학 연구에 염증을 느꼈다.

냉전은 ‘영어’의 위대함을 가르치고 ‘영어’를 쓰는 국민의 위대함에 대한 쇼비니즘을 불어넣었다. 모든 학문의 영역은 미국 정부와 학교 당국의 감시 속에 이뤄져야만 했고, 주류 학문에 도전하는 사상은 공산주

의로 간주돼 탄압받았다.

미국 내의 운동은 ‘소련’의 위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탄압으로 인해 1950년대까지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후반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베트남 반전 운동과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필두로 한 흑인 인권 운동,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에 항의하는 운동들이 뒤이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학 내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대학 내에서 좌파적 관점의 사회과학 연구 씨름들이 생겨났으며 촘스키와 같은 교수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정부와 학교측의 탄압은 여전했지만 학생들은 진보적 교수들의 주장에 귀 기울였다. 급진적 주장들이 오가는 토론이 활성화 되기 시작했고, 학문의 자유가 이전에 비해 확대됐다.

이 밖에도 《냉전과 대학》은 냉전 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정치적 주제들에 대한 주장들도 담겨져 있다.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미국 대학에 존재했던 학문적·정치적 억압이 우리 나라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김수행·리영희 교수와 같은 진보적 학자들이 정부와 학교로부터 당했던 박해와 사회 전반에 걸친 억압적 분위기를 미국의 상황과 연관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한상원

그레이트 게임



아메드 라시드
월간조선사

이
책의 원제

레반 — 중앙아시아에서의 전투적 이슬람, 석유 그리고 근본주의》다.

원래 ‘그레이트 게임’이란 19세기 말 인

도를 점령한 뒤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영국과 중앙아시아 정복 전쟁을 벌였던 짜르의 러시아가 각자 국경선을 긋고 아프가니스탄을 완충지대로 결정한 두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 다툼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금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신(新) 그레이트 게임'인 셈이다.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 내 군벌들과 이들에게 무기과 돈을 지원해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는 지역 국가들(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연방국)과 이들 뒤에 버티고 있는 열강인 러시아, 미국, 중국 사이의 각축전을 가리킨다.

파키스탄인 저널리스트 아메드 라시드는 21년 동안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모은 취재 자료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9·11 테러 직후 부시는 대중 매체를 동원해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 정권을 악마로 묘사했다. 중앙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아프가니스탄과 이 나라에 해성처럼 등장한 탈레반 정권에 대한 관심은 소수의 정치 평론가나 외교 전문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전쟁 옹호론자건 반전론자건 모두 라덴과 탈레반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갖추어야 했는데, 그 때문에 이 책은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동안 국제 정치 무대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때는 1979년이였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0년 뒤 소련이 패배하고 이 곳에서 물러나자 이 나라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그 때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을 만든 많은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끔찍한 가난, 기아, 불구가 된 사람들, 황폐해진 도시들 뿐 아니라 이슬람 근본주의에 충실한 반공(반소) 무자헤딘도 이 시기에 나타났다. 후일 탈레반의 모태가 될 파키스탄 내 아프간 난민 수용소와 마드라사(종교 학교)도 이 시기에 세워졌다. 카스피해 연안 국들이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카스피해 연

안의 석유와 천연 가스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던 소련 붕괴의 조짐도 이 때 나타나고 있었다.

아메드 라시드는 이 때부터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관심을 갖고 사태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이 창조한 괴물이라는 사실, 한때 미국은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탈레반이 권력을 잡도록 지원했다는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은 부패한 군벌들과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사실,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와 천연 가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미·러와 지역 열강들 사이의 권모술수와 암투를 벌인 사실을 저자는 매우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탈레반이 한 줌밖에 안되는 군대로 시작해서 어떻게 탐욕스런 군벌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1994년 봄, 한 마을 사람들이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에게 와서 한 군부대장이 10대 소년 두 명을 납치해 머리를 깎아 버리고, 병사로 끌고가 여러 번 강간했다고 호소했다. 오마르는 30명 가량의 탈레반을 모아 그 부대장의 기지를 공격했다. 그들은 소총을 16명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소년을 풀어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부대장은 탱크 포신에 매달아 교수형에 처했다. ... 나중에 오마르는 말했다. "우리는 타락한 무슬림과 싸웠습니다. 여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탈레반의 이데올로기에는 아프간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끄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탈레반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물론 이것은 탈레반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 책 2부는 탈레반 정권의 사회·정치 체제를 분석하고 있다.

주로 저자의 목격과 인터뷰에 기초한 것

이다. 예를 들면, 탈레반이 카불 점령을 앞두고 시아파인 하자라족을 학살한 것이라든지, 매주 금요일 축구장에서 범죄자를 공개 처형하는 것, 극도로 억압적인 종교경찰 국가의 면모, 마약 마피아들과의 공생 관계 등이다.

이 책을 우리 나라에 소개한 우익 잡지사인 월간조선사 입장에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내용들일 것이다.

만약 탈레반에 대해 환상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그 환상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실제 일부 사람들은 탈레반 정권에 대한 역겨움 때문에 사실상 반전문제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곤 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부시의 전쟁을 지지할 수는 없다. 반전론자들이 부시의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탈레반의 악행을 못 본 채하고 그들을 이상화하거나 옹호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진실은,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벌들과 싸우는 도중에 인종청소를 했다면 미국이 후원하는 북부 동맹 소속 군벌들 또한 인종청소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 처형이나 여성 억압적 조치들은 미국이 후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비밀비재하다. 미국은 북부 동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악행은 못 본 채 하지만, 탈레반은 궤멸시키려 한다. 이걸 결코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

미국이 이런 편파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 관계, 그 자신이 이 지역 이권을 놓고 벌이는 '그레이트 게임'의 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정한 역할"을 통해 평화를 가져오길 바란 것은 공상적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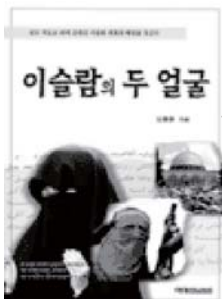
한편, 저자가 일부 군벌에 대해 우호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도 거슬린다. 예컨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풍족했던 문화 도시 헤라트를 기반으로 한 군벌 이스마일 칸을 훌륭한 반소 무자헤딘 전사라며 추켜세운다든가, 카불 북부 타지크족 거주지인 판지시르 지역 출신 군벌 아마

드 샤 마수드를 무적의 게릴라 명인이며 아프간인들의 독립과 자유를 염원하는 투사인 양 묘사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이런 몇 가지 거슬리는 점들을 제외하면, 이 책의 유명세만큼이나 우리가 몰랐던 아프가니스탄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많은 구체적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조박은평

이슬람의 두 얼굴



김동문
예영 커뮤니케이션

작년 가을
이후 이슬

람을 다룬 책들이 서점가를 뜨겁게 달구었다.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게 됐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정부나 언론들은 마치 아랍 사람들과 이슬람 교도들 모두가 테러리스트인 양 몰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서방이 만들어낸 이미지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

《이슬람의 두 얼굴》은 이슬람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책이다. 저자는 아랍 국가들에 특파원으로 머물면서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평범한 무슬림들의 삶과 이슬람 문화가 아주 쉽게 잘 묘사됐다.

무슬림들을 테러 집단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슬람은 세계 인구의 1/5 가량인 13억 명이 믿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다. 보통 기도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알라에게 기도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슬람의 교리가 적혀있는 꾸란을 보더라도 타종교보다 특별히 폭력적이지도 않다.

이 책에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를 보여 주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들에게 가난 이외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가자나 서안 등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의 실업률은 70퍼센트가 가까이 된다. 일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헤브론 주변 산악 지대에 있는 동굴에서 생활하는데, 이스라엘은 군대를 몰고가서 그 곳도 빼앗아 버렸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으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다. 이들은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난한 이유가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

아랍 국가들은 여성이나 타종교에 대해서 억압적이다. 거의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 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하다. '성'에 대한 논의들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아바야(차도르)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아랍에는 종교의 자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무교는 죄악시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는다. 기독교 예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레바논이나 이집트 같이 국교가 없는 나라는 그나마 낫다.

아랍의 빈부격차도 엄청나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가난 속에서 살아간다. 특히 지난 11년 동안 UN의 경제 체제를 받은 이라크의 영아사망률은 1천명당 131명이다. 경제 체제 전보다 2배가 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못이겨 유럽 등지로 이민을 가거나 밀입국한다. 지금까지 2천만 명이 유럽으로 이주했다. 이 숫자는 해마다 2백만 명씩 늘어난다고 한다.

아랍 사람들이 이런 억압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일부 다처제를 반대한다. 요르단에서는 명예범죄(‘순결’하지 못한 집안 여성을 폭행하거나 살해했을 때 그 죄를 감해 주는 제도)에 관한 형법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

며 수천 명이 시위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단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자국 지배자들에 대해서도 맞서기 때문이다.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그저 테러만을 일삼는 무자비한 조직이 아니다. 서방은 애써 무시하지만, 그들은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복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단체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알자지라 방송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아랍에서는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이 방송을 듣기 위해 위성 안테나를 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방송이 아랍 지배자들의 추악한 면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아쉬움은 명확한 관점과 역사적 고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랍 여성들의 시위나 자국 지배자들에 대한 불만은 얘기하지만, 명확한 정치적 의미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단지 사실을 나열하는 듯한 인상이다. 또한 아랍 국가가 억압적인 이유나 아랍과 제국주의 열강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이슬람을 꾸밈없이 친근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랍인들이 즐기는 유행가나 유희를 통해서 그들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유행가나 유희 중에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인티파다》 같은 아랍 역사에 관한 책들과 같이 이 책을 읽는다면, 아랍과 이슬람을 잘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승영

츨스키, 9-11



노엄 츨스키
김영사

미국의 대
중 매체

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공격받았다는 말을 텔레토비처럼 지겹게 반복한다. 미국이 공격받은 사실을 반복 재생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 북한 같은 '불량국가' 들을 공격하는 좋은 구실이 된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들먹이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매국이고, 전쟁을 지지하면 애국이라며, 모든 이에게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라고 으박지른다. 수많은 양심의 소리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켰다. 어느 광고문구처럼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종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츄츄키, 9-11》은 미국의 억압적 패권주의를 폭로해 왔던 행동하는 지식인 노엄 촘스키가 9·11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유감 없이 보여준다.

첫째, 촘스키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인도주의적 전쟁'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1980년대의 니카라과에서 테러를 저지른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한다.

둘째, 테러방지법 제정에서 볼 수 있듯이 9·11 테러는 군국주의화, 부의 편중, 대중운동의 억압 등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그 일에는 반드시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촘스키는 지적한다.

셋째, 촘스키는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이 진정으로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주장한다. 소련은 체첸에서, 중국은 위구르에서, 인도는 카슈미르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체에서 저지른 박해에 대해 미국의 양해를 얻고, 자국의 추악한 이익을 위해 미국의 전쟁에 동참했다고 말한다.

넷째, 어떤 범죄가 낳은 사상자의 수를 추정할 때는 현장에서 살해당한 자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사망한 사람도 헤아려야 한다. 그 예로 1998년의 수단 알시와 의약 공장 폭격은 죄 없는 아이들을 현재까지 의약품 부족으로 죽게 했으므로 9·11 테러의

희생자와 맞먹으며, 이라크 경제제재는 지금까지 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를 희생자로 요구했다. 촘스키는 이런 미국의 범죄는 셀 수 없는 사상자를 낳은 인간성에 대한 가장 잔인한 범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촘스키는 9·11 테러보다 더 비극적이었던 니카라과가 미국에 자살 테러를 하는 극단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후원 하에 유엔현장의 기본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폭력의 악순환을 막는 모범 답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니카라과의 민주 정부 수립을 막살낸 미국에게 UN이 니카라과에서 손을 떼고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쥐 생각해 달라는 것과 같다. UN이나 국제재판소가 미국에 가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교통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주차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미약할 뿐이다. 게다가 베트남전, 동티모르 학살, 천안문 사태, 미국의 수단 의약 공장 폭격에 대해 UN은 형식상의 진상 조사만을 하는 뒷북을 쳤다. 이런 기관을 통하여 폭력의 악순환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촘스키는 9·11 테러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텐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 분노하는 것이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중동의 개입과 세계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세계 자본의 잉크 역할을 한 석유 이권을 보장받기 위해 존재한다.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 규제 철폐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미국의 세계화는 이번 9·11 테러와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추진하는 세계화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국주의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뉘 수 없다. 세계화는 경제적 이익에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 아랍의 석유가 아랍인들을 위해 쓰이지 못하는 것과 석유 이권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똑같이 아랍인을 분노케 했

다. 결국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세계무역 기구에 대한 자살 테러는 미국의 극렬한 이익 추구 방식인 세계화에 대한 반발의 표현인 것이다.

한편 촘스키는 이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전쟁이 중앙아시아 자원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촘스키는 이번 전쟁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위해 벌이는 추잡한 경제 전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부시는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해 전 세계를 전쟁의 광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 법, 조약을 따르지 않으면 가혹한 전망이 예상되므로, 빈 라덴을 법정에서 세우기 위한 UN 주도 하의 노력"이 대안이라는 촘스키의 결론에 나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번 아프간 전쟁에서 라덴이 테러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대라는 이슬람권의 요구와 탈레반 정권이 제한한 라덴의 제3국 인도조차 일축하며 전쟁을 계속했고, 이에 대해 UN은 아무런 제재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부시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성을 발견할 수 없으며, 평화시에도 기대하기 어려운 법과 조약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은 미국이 9·11 테러를 자초하게 된 원인에 동감하는 사람들과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벌이는 노동자 해고, 부의 소수 집중 강화, 미사일 방어 체제 강행, 반테러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김정숙

거지를 동정하지 마라?



로랑 고르드니에
창작과비평사

실업은 자본
주의 사회

에서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경험 가운데 하나다.

지배자들은 짐짓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더 자유로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최저임금’이다.

우리는 경험상 그러한 조치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장과 경제학자들은 참으로 복잡하고 대단해 보이는 수학적 정리나 용어, 그래프 등을 들이대며 우리의 기를 죽이려 하곤 한다.

《거저를 동정하지 마라?》의 저자인 로랑 꼬르드니에는 “이와 같은 학술적 이론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교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실업 이론의 과학적 성격이 얼마나 의심스러운지”, “그 의미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신교전주의 실업 이론의 기초는 “완전한 자유시장 하에서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시장’이란 오히려 완전히 비현실적인 가정들이 전제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 이론의 수요/공급 곡선(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임금이 높을수록 공급이 늘어나고 낮을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어딘가에서 균형가격을 형성하는)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일하고자 할 거라는 식의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가정이나, 노동의 한계생산성 감소 이론 같은 전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할 때에만 원하는 대로 그려질 수 있다. 완전한 시장이 요구하는 가설은 끝이 없어서 ‘임금 노동자의 선호 관계의 완벽성과 곡선의 볼록함, 재화에 대한 욕구, 생산자에게 있어 규모 경제의 부재, 요소의 한계 생산성 감소, 계약 체결의 자유, 자유로운 경쟁, 가격에 대한 완벽한 정보, 행위자의 분자성 등등’이 목록

에 추가되어야 한다. 결국 완전한 시장이란 차라리 완전한 불가능에 가까운 셈이다.

실사 ‘노동 시장’이 경제학자들의 상상과 같이 매우 추상적인 방식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자본주의 경제는 ‘노동 시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만일 재화나 용역 시장 또는 금융 시장 같은 다른 시장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반대로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다른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게 이러한 사소한 결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이론이 지닌 장점은 단점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완전한 자유시장’ 이론에 따르면 실업자를 더 이상 실업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균형가격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기를 거부하고 ‘여가’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좀더 고상한 용어로 그들은 ‘자발적 실업자’일 뿐이다.) 정부와 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 이론은 실업의 원인에 대한 황당한 해답을 내려준다. 시장이야말로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최적의 상황을 제공한다. 하지만 어쨌든 실업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누군가가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와 사회복지제도는 이제 실업의 결과가 아니라 실업의 원인으로 뒤바뀌어 버렸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에 일하는 것을 가로막고 사장들이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업을 발생시킨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최저임금제를 폐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사장들이 더 많은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이 고용해서 더 많이 만들어도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 즉 이른바 유효 수요의 부족 때문이다.

또 주류 경제학자들은 사회복지제도가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 나서도록 만드는 유인을 없앴으로써 노동자들을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드는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이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에게 실업이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즉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일종의 실업 ‘임금’이나 최저임금의 변종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마찬가지다. 사회복지제도를 폐지하라! 그러면 완전 고용이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서 실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선택한, 의도된 결과이다. 즉 노동자들 자신이 겁쟁이였다가 약삭빠르며 게으르고 충동적이고 악하게 행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실업이 인간 사회의, 그리고 노동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업은 항상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업이 있었던 시기와 (거의 완벽한) 완전고용의 시기가 교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경기에 따라 춤을 추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얘기는 아무것도 설명해 내지 못한다.” 더군다나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후반 사이의 실업은 생산물의 가치 내에서 노동 비용의 감소와 동시에 이뤄졌다. 그리고 고임금과 폭넓은 사회보장이 제공되던 시기(1950~60년대)가 오히려 완전 고용에 더 가까웠던 적도 있다.

마르크스는 고전적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이후의 경제학자들을 “부르주아지에게 고용된 변호사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이 책은 그들의 최심판 퀘변에 맞서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그것도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말이다.

김대익

언어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



환경기자클럽
공리

이 책은 환경

부를 출입했거나 현재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의 모임인 환경기자클럽에서 만든 첫 책이다. 환경기자클럽은 1990년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 분야를 취재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나 깊이 있는 설명을 기대한 독자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책이다. 환경부에 출입했던 환경기자들이 보고 느꼈던 사실들 중에 기사화하기 힘들었다거나, 보도된 내용 바깥에 존재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 환경전문기자로써 환경부의 정책에 대해 평소 하고 싶었던 비판과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분석들을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식으로 넣어 퍼낸 책이기 때문이다.

환경 정책을 비판하면서 환경부 관료들의 개인적인 소신과 노력의 부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정보와 함께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권력과 기업의 꼭두각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의 정책과 관료사회의 무능한 모습을 시원하게 폭로하고 있는 점이다.

이 책은 '장이 파할 무렵' 나타나는 것이 환경부의 배역이라고 폭로한다. 건설교통부가 모든 허가를 내준 사업이나 개발에 대해 환경부는 그 사업이 거의 끝날 때 쯤에서야 나타나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곤 하기 때문이다.

시화 지구 개발 사업의 배경에도 1980년대 후반 중동 등 해외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이 철수하는 등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건설 장비를 활용하고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폭로한다.

정부와 기업의 기관으로서의 환경부의 모습은 새만금 간척 사업에 와서 그 절정에 달했음을 또한 폭로한다. 동강댐 건설 사업이 환경 단체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결국 강행되었다. 동강댐은 사업을 취소해도 정치적으로 결정적인 부담이 없지만 새만금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이 야당 총재 시절 지역 개발 공약으로 새만금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었고, 호남 지역이 정치적 지지 기반인 집권당과 정부는 사업 중단이 가져올 부작용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책은 환경부의 황소개구리 잡기 전시행정에서부터 하수 처리장 문제, 물 부족 문제, 기후변화협약, 야생동식물 보호문제,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 등 많은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골고루 담아내고 있다.

조상윤

사법살인-1975년 4월의 학살



천주교 인권위원회
학민사

서도원, 하재완, 김용원, 송상진, 도예중, 이수병, 우홍선, 여정남.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1975년 4월 9일에 법의 이름을 빌려, 이들 소위 인혁당

(인민 혁명당) 관련자 8명을 살해했다. 국제 법학자 협회는 그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8월 14일, 소위 제1차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이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통한 조작임이 밝혀지자 사건 담당 검사들은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중앙정보부는 검찰총장에게 압력을 가해 기소장을 제출케 하여 사건 관련자들이 실형을 받게 했다.

그 뒤 1974년에 소위 제2차 인혁당 사건이 일어난다. 1974년은 유신 독재가 출범한 지 2년째였다. 그 해는 1월 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1천여 명이 개헌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연초부터 어수선했다.

박정희는 1971년 대선에서 온갖 부정을 동원해 김대중 후보를 가까스로 이겼다. 위기 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다음해인 1972년 10월, 유신 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1973년 8월에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반유신독재 투쟁에 직면했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투쟁과 대학가의 동맹 휴학을 시작으로 장준하 등 재야 인사들의 헌법 개정원칙 백만인 서명 운동에 이르기까지, 반유신 독재 투쟁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

박정희 정권은 반유신 투쟁이 수그러들지 않자, 급기야 1974년 1월 8일, '유신헌법을 반대하면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형을 구형하겠다'는 긴급조치 제1호와 제2호를 선포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반유신독재 투쟁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3월 신학기 시작과 더불어, 대학가는 다시 반유신독재 시위로 술렁였다.

4월 3일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고려대, 서울여대 등에서 동시다발로 시위가 벌어졌다. 이 때 뿌려진 유인물에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명의의 ‘민중·민족·민주 선언’이 있었다. 민청학련이라는 이름은 특정한 학생운동 단체가 아니라 시위 주도 학생들이 선언문을 만들 때 아무 이름도 없으면 곤란하다면서 임의로 붙인 이름이었다. 즉, 인혁당이 학생들을 배후 조종해서 민청학련을 만든 일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4월 3일 밤 10시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 민청학련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거나 비판한 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이 조치로 1천 24명이 구금, 조사를 당했다.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된 지 3주일이 지난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민청학련 사건의 수사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 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10년 전에 담당 검사들의 기소 거부라는 파란을 일으켰고 재판 과정에서도 실체를 입증하지 못한 인혁당이 ‘재건’을 기도하고 4월 3일 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는 발표는 분명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인혁당과 관련해서 구속된 22명은 중앙정보부 밀실에서 탈장과 의식 불명에 빠질 정도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고문에 의한 피의자 조서만으로 5월 27일 기소됐다. 군 사법당국은 재판에서도 피의자들의 법정 진술을 변조, 날조했으며 심지어 제1심 공판 도중 변호인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재판은 사실상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대법원 상고심 때 이들은 법정에 나오지도 못했다. 재판 결과, 서도원을 비롯

한 8명이 사형을, 나머지 14명 모두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도원 등 8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다. 박정희 정권은 고문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시신들 중 일부를 유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급히 화장해 버리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사형당한 8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경력이 있고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에 참여했을 뿐, 북의 지령을 받아 인혁당 같은 정치조직을 결성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국민들의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해 유신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려 한 박정희 정권의 추악한 음모에 희생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위 인혁당 사건의 실체다.

소위 인혁당 사건을 다룬 첫 단행본인 이 책은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가혹한 고문, 관련자 가족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온갖 재판 절차를 무시한 사례 등을 다뤄 읽는 이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한다.

인혁당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이 책의 출판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다.

김유정

강요된 침묵

강요된 침묵

— 억압과 폭력의 남성 지배문화

김유정 지음 / 김유정 옮김



엠마뉴엘 레이노
책갈피

몇 달 전 책
갈피 출

판사에서 《강요된 침묵》이란 책이 나왔다. 만약 출판사의 명성만 보고 그 책을 샀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이 책은 책갈피의 다른 책들처럼 훌륭한 마르크스주의 저작이 아닐 뿐더러, 어느 정도 쓸모 있는 분석이나 자료조차 담고 있지 않다.

이 책의 저자 엠마뉴엘 레이노는 책 전체에 걸쳐 ‘모든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며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내놓는 근거는 너무나 빈약하다. 그는 역사를 “가부장제[여기서 가부장제는 남성 지배라는 느슨한 의미—인용자]의 역사”라고 단정지으면서도, “[가부장제의] 기원을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말끝을 흐린다. 도리어 그는 “가부장제 권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 권력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까?” (21쪽)라고 묻는다.

그러나 곧 다른 곳에서 그가 생각하는 가부장제의 기원을 알 수 있다. 그는 ‘남성 지배’의 원인을 타고난 생물학적 조건에서 찾고 있다. 그는 사회가 “성계급”(“남성계급”, “여성계급”)으로 나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계급” 구분의 기초는 생물학적 성차다. 페니스가 “남성이라는 계급의 자격을 결정짓는 기관” (57쪽)이다.

그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매우 단순하다. 남성 지배나 성 차별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싶어하기 때문이고, 남성은 그럴 능력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전유 그리고 남성간의 권력 투쟁의 역사”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순전한 상상일 뿐이다. 계급 사회 이전에는 여성이 억압받지 않고 평등했다는 증거가 많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여성이 높은 지위를 누리는 사회를 묘사했다. 한 예로 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은 캐나다의 나스카피족의 여성들이 거주지와 작업 일정을 결정할 때 압

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데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남성들이 때로는 자기 피를 이은 자식이 누구인지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여성들이 성적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특히 우려했다.

엠마뉴엘 레이노는 여성 억압의 기원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계급 사회 내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변해왔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가부장제가 생겨난 이래로 여성의 지위는 아주 단순했다. 여성은 언제나 전유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노예와 마찬가지로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사회의 여성이나 중세 유럽의 여성, 자본주의 하의 여성의 지위가 모두 같다는 것은 추상적인 공론일 뿐이다.

이 책에서 모든 남성은 지배자고 모든 여성은 피지배자, 희생자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그림은 역사에서 벌어진 무수한 계급투쟁—남녀는 각 계급에 포함돼 싸웠다—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남성이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노예 소유주와 노예, 귀족과 농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커다란 격차를 볼 때 터무니없다. 저자는 이런 모순을 논리적 일관성 없이 이리저리 뻔뻔하는 식으로 해결한다. 그는 계급, 생산양식 같은 용어를 완전히 제멋대로 쓰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슬쩍 끼워넣는다. 성기로 계급을 계속 나누다가 어떤 논리적 설명도 없이 갑자기 “가부장제 하에서는 남성도 노예 계급으로 전락할 수 있다.”(166쪽)고 말한다. “노예 소유주와 노예 사이의 투쟁은 남성 계급 내의 갈등뿐만 아니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 좌우된다”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책 어디를 봐도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이 역사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의 논리는 전혀 일관성이 없다. 어떤 곳에서는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의 단순한

외피일 뿐이라고 말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가부장제는 자본주의와 별개의 생산양식이라고 말한다(왜 그것이 별개의 생산양식이고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설명도 없이). 어떤 곳에서는 모든 남성이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말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남성은 통치권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어떤 곳에서는 권력이 물질적 이익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오늘날 권력은 물질적 이득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저자는 기본으로 역사를 인간의 탐욕적 본성(권력욕)에 따른 끝없는 투쟁의 역사로 보는 부르주아 역사관을 가졌으면서도 때때로 마르크스를 차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 아나키스트다. 그는 “권력 없이 살 고자 하는 공통적인 바람으로 단결한 자유롭고 자주적인 개인들의 행동”을 대안으로 여긴다.

그는 대중 투쟁을 불신한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중 투쟁을 폄하하는 데 몰두한다. 이 책에 따르면, 스파르타쿠스 봉기, 스페인 내전, 파리 코뮌은 오직 남성 혁명가들의 여성 배제주의(“대체로 남성들은 혁명을 그들만의 문제라고 간주해 왔다”)를 입증하는 예일 뿐이다. 그래서 위대한 스파르타쿠스 봉기는 인간 해방이 아니라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 지분을 되찾으려”는 남성 노예들의 투쟁이 된다. 노예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도 역시 남성이다!”라고 외쳤을 뿐이라는 것이다.

스페인 내전에서는 전국노동자연맹(CNT) 내 남성 노동자들의 성 차별주의 만을 지적해 놓고는(마치 이 때문에 스페인 내전이 패배하기라도 한 양) 이렇게 말한다. “대개의 경우, 혁명가라고 자처하는 남성들은 그들의 행위와 저작에서 여전히 여성을 전유해 왔다.”(169쪽)

각각의 혁명과 반란에 대한 피상적 설

명은 접어두더라도 여성들이 혁명기에도 “가부장 조직 내에서 전통적으로 부여된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완전한 왜곡이다. 스파르타쿠스 봉기, 스페인 내전, 파리 코뮌에서 모두 여성들은 자기 계급의 남성과 함께 목숨바쳐 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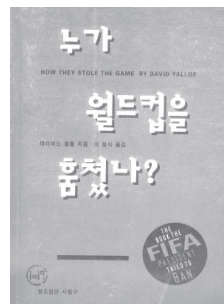
특히 파리 코뮌에서 여성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파리 코뮌에 적대적이었던 《더 타임스》의 특파원은 “프랑스가 프랑스 여성만으로 구성됐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끔찍한 나라가 됐을 것인가!” 하고 개탄할 정도였다. 저자는 파리 코뮌에서 여성의 능동성은 인정하면서도 남성 혁명가들을 비꼬는 데 그치고 있다. 마치 남성 혁명가들 때문에 혁명이 패배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위대한 혁명의 순간에도 여성은 배제되거나 기껏해야 부차적 역할을 맡을 뿐이라는 얘기는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운 평범한 남녀의 투쟁 정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저자는 노동 대중이 투쟁에서 보여 준 단결과 해방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여성 해방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는 기껏해야 ‘남성’에게 ‘자신과 싸우라’고 촉구할 뿐이다.

역사에 대한 피상적 인식, 왜곡, 공상, 독설로 가득 찬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진익

누가 월드컵을 훔쳤나



데이비드엘롭창조집단
시빌구

이 책의 지
은이 엘

롭은 사건 취재 전문 작가다. 그는 의문의

살인 사건들을 낱낱이 파헤쳐 진상을 밝힘으로써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거나 사형수를 구해내기도 했다. 그런 지은이가 이 책에서는 20년 넘게 국제 축구계의 ‘제왕’으로 군림해 온 주앙 아벨란제의 추악한 모습과 함께 역대 월드컵 경기나 국제축구연맹(FIFA)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월드컵이 “계급이나 인종을 초월해” 인류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구현한다는 세간의 통념과는 사뭇 다른 현실과 마주친다.

1930년에 시작된 월드컵 경기의 역사는 이런 고상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월드컵 유치 단계부터 시작되는 국가 간 경쟁과 분열, 이에 따른 FIFA 내의 알력과 갈등은 온갖 뇌물과 부정·부패, 각종 스캔들로 이어졌다.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마다 승부 조작, 심판 매수, 금품·향응 제공, 경기장 안팎의 폭력, 편파 판정 시비 등이 끊이지 않았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엘살바도르는 멕시코와의 경기 도중 프리 킥을 얻었다. 그런데 재빨리 프리 킥을 한 선수는 멕시코의 페레스였고, 이어진 멕시코의 공격은 골로 연결됐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선수들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주심은 이를 골로 인정했다. 1966년 영국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상대편 선수들의 무차별 폭력에 부상을 입고 환멸을 느낀 나머지 다시는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폭력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축구 신동 마라도나에게도 되풀이됐다. 또 축구 경기장이 갑자기 권투나 격투극 도장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

엘름은 월드컵이 이렇게 타락한 원인을 아벨란제한테서 찾는다. 아벨란제는 24년 동안 FIFA 회장으로 있으면서 국제 축구계를 과도한 상업주의에 넘겨 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뇌물, 회유, 협박, 거대 다국

적기업과의 결탁, 불법 무기 거래, 마약 매매 등 온갖 권모술수와 돈으로 국제 축구계를 주물러 오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도둑질해 갔다. 아벨란제는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권력을 가진 자라면 어떤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상관없이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잔혹한 군사 독재자 아바차는 죽을 때까지 아벨란제로부터 “좋은 친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군사 독재자들은 아벨란제의 도움을 얻어 국내 정권 유지에 월드컵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이 월드컵 경기의 어두운 면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월드컵 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펠레의 작품’을 비롯하여 마라도나, 에우제비오, 호나우두 같은 축구 스타들의 활약상이나 브라질과 이탈리아가 맞붙어 월드컵 사상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했다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의 결승전 장면 등 멋진 경기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인간의 몸놀림을 통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작품’에 대한 열광과 환호, 그런 작품의 생산과 유통을 지배하는 작자들의 추악한 모습, 이 둘이 공존하는 스포츠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이수연

중국을 가짜다



제스퍼 베커
홍익출판사

현대 중국에
대한 대부

분의 저작들은 두 가지 극단에 빠져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시장 개혁이 후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를 놀랍도록 변모시키고 있다고 열광한다. 이들은 중국을 가난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씩씩이 성장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미래상이라고 예찬한다.

그림의 다른 쪽 극단에는 중국의 몰락이 임박했다는 식의 선부론 목시록이 존재한다.

제스퍼 베커의 《중국을 가짜다》(원제는 THE CHINESE)는 이런 양극단을 피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중국의 급속한 변화와 그것이 중국인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제스퍼 베커는 지난 15년 동안 영국 BBC 방송과 <가디언>의 중국 특파원을 지냈고, 현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베이징 지사의 국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베테랑 저널리스트다. 그래서 이 책은 전혀 어렵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독자들이 마치 중국 현지에 있다고 느낄 만큼 흥미진진하게 쓰여졌다.

베커는 광활한 중국을 오랜 기간 여행하고 관찰하면서 얻은 느낌과 생생한 기록을 해박한 역사 지식과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석을 곁들여 숨쉴 있게 다룬다. 지역간의 놀랄 만한 격차, 극심한 불평등, 만연한 부패가 통렬하게 폭로되고, 화려한 통계 수치에 가려진 중국 노동자·농민·실업자들의 고단한 삶이 밀도 있게 파헤쳐진다.

이 책의 1장은 “변방의 고지에서 돌 투성이 작은 농지와 씨름하고 있는 극빈층 농업 인구들”을 조명한다. 마지막 장인 13장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부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한다. 그리고 다양한 쟁점과 여러 집단들에 대한 설명이 책의 나머지 장을 채우고 있다.

베커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예찬하는 경제 특구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 처했는지를 폭로한다. “대부분 20세 전후의 여자 근로자들이 12시간씩 교

대로 일하고 한 달에 두 번 휴식하는 최악의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둑질을 방지하기 위해 문이 잠겨지는 좁은 기숙사방"에서 10명 내외가 잔다. 상하이의 섬유 공장에서는 40만 명의 중년 여성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직장을 잃었고, 헤이룽장성의 8천만 노동자 중 5분의 1이 급료를 지급받지 못했고, 3분의 1 이상이 불완전 고용 상태로 내몰렸다.

의료와 교육에 관한 장에서는 사유화가 어떻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파괴하고 있는지 고발한다. '위대한 인민공화국'에서 건강과 교육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지불 능력에 좌우된다. 그러나 중국에 절망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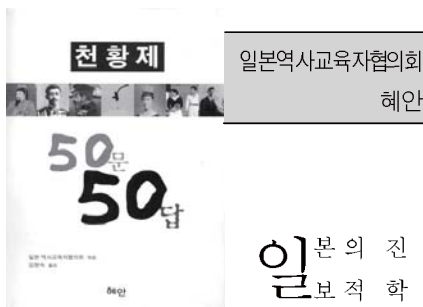
1997년에 시춘 근교에서 폭동을 일으킨 수만 명의 섬유 노동자들과 높은 세금과 당 관료들의 도둑질에 저항하는 광범한 농민들의 시위를 묘사하면서, 저자는 시장의 쓰디쓴 결과에 대한 저항도 보여준다.

베커의 접근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중국 지배자들의 행태를 계급적 지위에서 찾기보다는 중국 황제의 오래된 전통에서 찾는다. 또 그가 설명한 중국 역사의 일부는 잘못된 점도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모순과 딜레마에 대한 그의 분석은 탁월하다.

《중국은 가짜다》는 모순에 가득찬 중국 사회에 대한 생생한 르포이자, 신랄한 보고서다.

강철 구

천황제 — 50문 50답



일본의 진보적 학

자들이 쓴 《천황제 50문 50답》은 천황의 기원부터 현재의 헤이세이 천황의 즉위까지 그 동안 제기된 쟁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문답집만은 아니다. 《천황제 50문 50답》은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아들이라는 천손강림신화'가 어떻게 지배자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됐는지에 대한 분석과 천황제가 일본 역사에서 어떻게 민중의 불만과 투쟁을 억누르고 민중을 동원하고 착취하는 수단이 됐는지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민중의 역사책'이라고 부를 만하다. 민중적 관점에서 천황제로 표현되는 일본 지배층의 지배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잘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황의 역사는 기원전 6백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주를 천황이라 칭하며 신이나 혹은 신에 가까운 존재로 보는 이데올로기는 민중의 무권리한 상태를 합리화해 민중 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생겨났다."

하지만 무신 정권이 힘을 가지고 있던 일본에서 천황이 실질적인 힘을 갖기 시작한 것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다. 그전에 천황의 존재는 "실권은 없되 국가의 대표자라는 권위를 지니며, 실권을 장악한 자가 천황을 방패막이 삼아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했다.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일본에 대한 개입이 본격화된 1868년에 군벌들간의 계속된 내전과 막부의 착취에 환멸을 느낀 농민들은 전국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도시에서는 쌀 값 인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터져 나왔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의 지배자들은 막부 체제로는 성난 민중을 달랠 수 없고 외국의 개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막부를 대체해 천황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됐다. 그러나 이것은 막부 타도에 그치지 않고 봉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메이지유신을 거치는 동안 제국 헌법이 제정됐고 천황은 모든 통치권을 거머쥐었다.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은 전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천황의 권력을 신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천황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자 일본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들은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묻고 천황제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전후 폐허 속에서 노동자들은 식량위기 해결을 요구하며 천황궁으로 몰려갔다.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천황을 전범으로 재판할 경우 일본이 공산주의화 될 수 있다."며 천황을 점령 도구로 이용해 좌파의 성장을 견제했다.

천황은 1946년 1월 1일 소위 '천황의 인간 선언'으로 알려진 조서를 발표한다. "천황을 살아 있는 신으로 간주하고 일본 국민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으로 보며 나아가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공의 관념이다." 이후 평화헌법에서 천황의 존재를 상징천황제로 규정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오게 된다.

1999년 천황찬가인 기미가요와 히로마루가 일본의 국가와 국기로 지정되고, 역사교과서 왜곡과 일본의 재무장 등 일본의 우경화 과정에서 천황을 국가 원수로서 명시하자는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천황제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그것이 천황제인 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에 배치된다.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는 운동은 천황제에 반대하는 운동과 맞물려 가야 한다.

이원재



8호(2002. 1)

- 이스라엘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
- 아프가니스탄 여성은 해방됐는가?
- 보신당 논란
- 백색 공포?
- 김대중, 선거, 진보 진영의 도전
- 강준만의 '비판적 지지'를 둘러싼 논쟁
- 현재의 재외동포법 위협판결
- 브뤼셀 EU 정상회담 반대 시위
- 중국은 어디로?
- 크리스마스의 해방

- 끝없는 전쟁?
-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 인간 배아 복제
- 월드컵, 스포츠, 자본주의
- 철도 노동자 투쟁
- 국가인권위원회

4호(2001. 9)

-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 민주노총 수배 간부들의 자진 출두 이면
-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 공무원노조 합법화
-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
- 제노바 G8회담 반대 시위
- 소련 붕괴 10주년
- 가톨릭 급진주의는 죽었는가?
- 부시의 MD 계획에 대한 반대 운동
- 아르헨티나
- 메가와티의 불안한 앞날

7호(2001. 12)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정세 분석
- 하워드 진/나오미 클라인/에드워드 사이드
- 미국 정부의 생화학 테러
- 오늘의 제국주의와 전쟁
- 집권당의 위기, 대안은 무엇인가
- 구로울/동대문을 선거 활동 평가
- 수전 조지의 WTO 비판
- 철도 노동자들의 사기업화 반대 투쟁
- 의사들의 안락사·낙태·대리모 지침
- 네그리의 《제국》비평
- 교사들은 왜 7차 교육과정안을 반대하는가

-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중 봉기
- 전쟁과 근본적 사회 변혁
- 파산한 김대중 '개혁'의 전도사 노무현
- 현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
- 왜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가
- 마약 합법화를 옹호하는 주장
- 사형을 폐지하라
- 김대중의 시장주의 교육정책 비판
- 일본 경제 위기

6호(2001. 11)

- 김대중은 전쟁지원을 중단하라
-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비판
- 아프가니스탄
- 갈릴갈리에 선 파키스탄
-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이유
- 전쟁, 거짓말 그리고 언론
- 유엔
- 전쟁을 반대하는 주장들
- 홍근수/이마드 자우하르/영국 과학자들의 반전 성명서
- 전쟁에 대한 사회 변혁가들의 태도
-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편견
- 유대 시오니즘의 본질
- 일본의 군사대국화
- 세계화 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
- 부패-자본주의의 만성 고질병
- 출입국 규제를 철폐하라

3호(2001. 8)

- 김대중 언론 개혁의 모순
- 모든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하라
- 헬렌 켈러
- 8.15 민족공동행사를 비판한다
- 민주노총 상반기 파업 평가
- 지구 온난화와 자본주의
- 글리벡 가격을 인하하라
- 매매춘 합법화
- 부시 행정부 6개월 평가
- 제노바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
- 이스라엘: 중동 전쟁의 화근

2호(2001. 7)

- 심화되는 정치위기
- 진정한 폭력
- 서울대 개혁 논란
- 안락사 합법화 논쟁
- 〈반〉지의 모호한 김대중 퇴진론
- 모성보호법 - 후퇴없이 즉각 개정해야
- 6.15공동선언 1년을 돌아보며
- 새만금 간척이 가져올 결과들
- 민족과 계급
- 격동의 인도네시아
-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5호(2001. 10)

- 전쟁은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은 말한다
- 조지 W 부시의 사악한 정책
- 오사마 빈 라덴
- 이슬람 근본주의
- 세계 경제는 공황으로 가는가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
- 미국 정부가 최대의 테러리스트
- 탈레반
- 테러리즘 비판
- 김수행 교수 강연
-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
- 시장이 낳은 주택대란

1호(2001. 5)

- 퀘벡의 반자본주의 시위
- 무기 살 돈을 의료비로 돌려라
- 미친 스타워즈 계획을 중단하라
- 중동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 부시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
- 미스코리아 대회 - 여성 차별 축전
- 계속되는 경찰 폭력 위협
- 경찰은 왜 그러도 폭력적일까?
- 김대중 퇴진을 지지하지 않는 주장을 비판한다
- 일본 사회의 양극화와 역사 교과서 왜곡

